

시민운동 종합정론지

# 월간 경실련

통권 169호 | 2019 05 06 월호



## 패스트트랙 위에서 멈춰버린 국회

30주년 특집 - 경실련이 묻다  
하성규 前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2019 부동산개혁  
분양가 거품 방지하는 영터리 분양원가 공개

시사포커스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 커버스토리

패스트트랙 의안 발의를 두고, 국회는 한동안 볼 수 없었던 동물국회의 본능을 꺼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원외투쟁을 이어가면서 국회가 멈춰버렸습니다. 국민을 위한 민생과 개혁은 뒷전이 되어버린 국회. 언제쯤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 패스트트랙 위에서 멈춰버린 국회



# CONTENTS

## 동승동 칼럼

10 막말 정치에 거세당한 민생 / 윤순철

## 30주년 특집

12 ① 경실련이 묻다! 하성규 前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인터뷰 / 이성윤

19 ② 월간 경실련 30년 역사(3)

22 ③ 역사 속 그날 이야기 -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

## 2019 재벌개혁

26 ① 재벌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 김건희

30 ②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개선방안은? / 오세형

## 2019 부동산개혁

32 ① 분양가 거품 방지하는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 최승섭

36 ②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 남은경



## 12 경실련이 묻다!

하성규 前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인터뷰



## 26 2019 재벌개혁

재벌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 시사포커스

- 40 ① 패스트트랙 정국이 단진 화두 / 서휘원
- 45 ②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는가? / 조성훈
- 49 ③ 인보사 사태, 식약처 할 일 했으면 없었을 일 / 최예지
- 52 ④ 기업이 법에 적용받을지를 결정하는 황당한 자동차 레문법 / 윤철한



### 우리들이야기

- 58 ① 청년 농업인 육성, 지역 차원에서 논의해가자 / 김기흥
- 61 ②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 육먹을 각오로 쓰는 타워크레인 이야기 / 장성현
- 64 ③ 문화산책 - 현산어보를 찾아서 / 노건형

40 시사포커스  
패스트트랙 정국이 단진 화두

###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 67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 68 경실련 일일보고
- 72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61 우리들 이야기  
육먹을 각오로 쓰는 타워크레인 이야기



## 막말 정치에 거세당한 민생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한다. 말을 들으면 말하는 이의 생각이나 인격을 가늠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나 생채기를 줄 수도 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대중을 향해 하는 말은 당사자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에 정치인들의 말은 신중해야 하고 절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쏟아내는 말을 듣노라면 귀를 씻어도 씻기지 않을 막말 배틀이다. 지난 60일 동안 막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행정부, 사법부를 넘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좌파독재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내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 하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말해 논란이 있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대담 질문자인 KBS 기자가 독재자 표현을 한 후, 문빠·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미친 정부로 규정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막말 상대의 대응도 거셌다. 여야4당이 선거제·사법개혁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후,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하여 장외투쟁으로 나가자 민주당은 이를 가출정치라고 하였다. 이 해찬 민주당 대표는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에게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없다. 독재 통치자들의 후예’라고 하였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좀 미친 것 같다고 하였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 국민분열 발언을 하자, ‘이런 망언이 자유한국당을 극우 반민족당이라 말하고, 나 원내대표

이름이 ‘나베 경원’이라는 이야기가 계속된다’고 하였다. 진보정당을 표방한 정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가 5·18 특별법을 처리하지도 않고 5·18 기념식에 참석하려 하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이코패스로 지칭하였다.

막말은 경제문제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 않고, 성공이라 말하는 문 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으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상처가 났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방치해 더 커지는 병인 한센병’으로 되받아 막말의 끝판을 보여줬다. 한센병은 일제 때부터 박정희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강제수용소에 격리수용 되어 강제노역, 폭행, 감금 심지어 강제 불임시술, 강제 낙태가 행해졌던 반인도주의적 범죄로, 일정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가해졌던 국가적 폭력과 억압, 그로 인하여 가중되었던 사회적 차별, 배제, 멸시가 복합적으로 내재된 것이다.

정치권의 거친 막말 뒤의 해명도 궁색하다. 자유한국당은 보수당에 편파적인 ‘극우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것으로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며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 한다. 여당은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의 후예가 헌법 수호를 외치는 적반하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막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이나 공천을 기대하기에 그 기세를 스스로 꺾을 수 없을 것 같다. 막말 배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 반민특위, 세월호 등의 연이은 막말 시리즈로 보수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했을 지라도 탄핵 이후 흩어졌던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봤다. 이에 대응했던 민주당도 존재감을 지켰다.

막말 정치의 결과는 민생의 거세였다. 민생을 제쳐두고 막말을 뱉어내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서 역장이 무너지는 시민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 평가는 시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세금을 받으며 막말의 유희를 즐기는 정치인이 다시는 국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쉽게도 우리 법은 정치인들을 임기 중에 심판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그러니 심판은 선거 때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 거리에서, 지하철 역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유권자들에게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한 표 달라고 애걸할 것이다. 달창공천, 한센병공천, 다이내마이트공천, 좌파독재공천, 미친정부공천, 달나라공천, 나베공천, 사이코패스공천, 반민족당공천 등을 시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내는 시민이 아닌 보스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들을 지금부터 기록하여 공천 때부터 확실히 정리시켜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하고 민생이 산다. 

## 경실련이 묻다! [ 인터뷰 ]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성규 前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pain2c@ccej.or.kr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입자들의 삶은 위태롭지만, 도시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0주년 기념 인터뷰는 경실련 창립 때부터 주거권 운동을 주도했고, 도시개혁센터 초대 대표이기도 했던 하성규 교수를 만나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도시정책과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 지난 5월 10일, 하성규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1980년대 한국에서 생소했던 주거권, 최저주거 기준 등 주거복지영역을 사회에 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사회의 주거 현실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A. 1982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도시재개발 중에 합동재개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합동재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오래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형태의 재개발이었어요. 서울 여러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가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철거를 당했는데 이때 오래 살았던 세입자들이나 일부 집주인들이 철거반대운동을 했고, 자살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가난한 사람의 주거를 강제철거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된다 해서 한국의 강제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하는 성명도 있었고, 세미나도 있었죠. 그리고 아시아주거연합이라고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둔 단체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고요.

1996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엔해비타트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 민간인 대표로 갔습니다. 당시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거는 인권이다'라고 해서 주거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주거권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경실련 운동을 하면서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권

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으로서 최소한 갖춰야 할 주거기준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영국, 독일,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최저주거기준이 다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우리도 선진국 처럼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자, 주거권을 확보하자고 해서 경실련이 앞장서서 운동을 했죠. 경실련이 그 당시에 주거권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시민단체보다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Q. 경실련도 초창기에 세입자 운동을 하면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경실련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저는 학교에서 주거정책, 주택정책 강의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자문도 구했고, 세미나도 하고, 언론에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우선 정부의 주거정책,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부에만 맡겨서는 힘들겠다 판단했고,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주택법이라는 것을 만들자고 했죠. (법이 지금은 만들어졌고, 거기에 최저주거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법제정운동이나 국제기구들과하고 연대를 통해 한국에 주거권의 현실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을 했죠. 그 이후에 정부가 어떤 조치들을 취했

냐면 세입자들을 위해 3개월 생활비를 지불한 다던지, 철거당할 때 이사비용을 주게 한다던지, 일정 단지를 만들 때는 10~20%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한다던지 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이런 조치들을 정부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경실련을 중심으로 많은 주거권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이후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로 도시개혁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경실련이 처음 생길 때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 투기가 심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거운동을 했는데 도시가 안전, 주거, 교통, 환경 등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문제를 정부에 게만 맡겨놓을 수 없고, 우리가 감시도 하고, 정책적 대안도 내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도시개혁센터를 창립하게 됐죠. 우리가 창립기념대회에서 앞에 내건 슬로건이 '시민 중심 도시', 즉 사람중심 도시였죠.

도시라는 것이 물리적인 실체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지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해요. 외국에서도 이미 많은 도시들이 인간중심 도시론이라고 해서 다리를 하나 놓고, 집을 하나 짓고, 건물 하나를 지어도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행태나 선호, 편리함을 생각해서 도시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시민중심 도시만들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시민들의 참여도 많이 독



▲ 1997년에 열린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창립대회 모습



려를 했죠. 그리고 도시개혁센터에서 상담센터도 만들어서 재개발지역이나 교통 및 환경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상담을, 방문하면 대면상담을 했죠. 또 시민들이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도시대학을 만들었는데 주로 그때는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도시대학에 입학하면 몇 주간 우리가 돌아가면서 경실련 강당에서 강의하고, 저녁 늦게까지 토론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도시개혁센터의 중요한 활동영역이었고,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도시개혁센터가 생길 무렵,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안전에 대한 불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이 없어지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감리예요. 어떤 건물을 짓거나 건설하거나 했을 때, 그 주체와 감독하는 기관 간의 유착이랄까, 이런 것에 제대로 원칙이 없는거죠.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이죠. 원래 계획된 대로 시멘트도 넣고, 철근도 쓰고 해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부패, 정직하지 못함입니다. 요새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는데 업자들하고 결탁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지요. 예전에는 어떤 공사를 하면 공사실명제를 하자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공사를 누가 설계를 했고, 누가 감리를 했고, 감독을 누가 했는지를 공개하는 것인데 뉴욕에서 이렇게 했어요. 뉴욕에서 다리를 놓거나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참여한 인원들을 다 공개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우리는 실명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웃긴 건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길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스팔트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또 팝니다. 그래서 가스라인, 전기선 공사를 하죠. 이런 체계적이지 못한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이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캠페인을 했었죠.

**Q.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A. 도시재생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유기체라고 하죠. 사실은 무생물이지만. 도시라는 게 살아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도시 내에 활동하는 산업도 구조적으로 변경이 되고, 사람도 바뀌고 해서 도시는 한 번 건설해놓으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변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보면 도심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주로 외곽지에 신도시

나 신개발지를 만들어서 도시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죠. 오래된 지역을 원도심이라 그러는데 이 지역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데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계획 자체는 문제인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국적으로 획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도시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사회적 여건이나 물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해야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첫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공공의 자금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을 보면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많이 도입합니다. 우리나라는 관이 주도를 하지만 민간의 활력, 민간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나라만의 모형이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도시에 맞는 모형이 있고, 영국은 영국에 맞는 모형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진정한 도시재생의 모형이 뭔가 하는 것이 나와있질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 오래 살았던 원주민이나 세입자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영세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이주해서 살기는 힘이 드니까,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2층짜리 상가가 15층으로 건설되면 임대료가 확 올라버리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쫓겨나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상가, 세입자, 가난한 사람, 사회취약계층까지 다시 그 지역에 안전하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썩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계속 살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서 또 다른 도시코너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피고, 배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Q. 최근에 쓰신 책 <한국인주거론>에서 “집은 삶의 보금자리인가, 고통의 뿌리인가가 이 책의 궁극적 질문이다”라고 쓰여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주거양극화 같은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제가 쓴 책이 한국인주거론인데 부제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보금자리인가 고통의 뿌리**



인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집이라는 것은 원래 한 가정이 가족끼리 오순도순하고, 건강, 안전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보금자리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보금자리가 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집이라는 것이 이재(理財)의 수단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는 삶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남겨서 더 큰 평수로 가느냐, 더 좋은 동네로 이사가느냐 하는 거죠. 그건 사실 별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갭투자라고 해서 아파트를 소위 말해서 돈버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 임대소득세를 충분히 내야 하는데도 소득을 탈루하거나 안 내거나 하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이제 삶의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이재의 수단이고, 투기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도시 아파트는 고통의 뿌리죠. 제자들을 보면 대기업 다니는 부부가 열심히 별면 집을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40대 초 중반 친구들을 만나면 아직 집을 못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활에 고통을 주는거냐는 것이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입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커지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요. 우리나라에도 임대주택이 없진 않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이제 우리의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1인 가구에 맞는 주택형태나 프로그램이 일찌감치 개설되고, 거기에 대해 여

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도 많아요. 이런 1인 가구, 빈곤 노인가구, 청년들의 주거 빈곤, 신혼부부들의 고통이 이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집이 삶의 보금자리여야 하는데 이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고통의 뿌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했죠.

**Q. 경실련이 올해로 창립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실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해요. 너무 이론적이고, 기본적인 얘기인데 시민중심, 주민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교수, 건축가 등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데 핵심은 시민 스스로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 집단의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것을 정치적인 기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물론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고 해서 정치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처음부터 내가 시민을 위해서 시민단체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적인 활동 기반으로 생각하면 그 동기는 불순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

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도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운동을 하면 지속되어야 되고, 지속한다는 것은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을 봐야하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버려요. 경실련 운동도 대부분 그래요. 물론 완결을 보는 그런 운동도 있지만, 많은 경실련 운동이 시작은 좋은데 끝은 별로였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실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 주택부터 경제 전반까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경실련은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거든요. 제한된 두뇌와 인원, 재정을 가지고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

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거예요. 100개 사업을 나열하면 다 못하거든요. 그러나 올해는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총력을 다해서 모든 지혜와 이런 것을 다 모아서 끝까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경실련 운동이 좀 더 확대되고, 사회적 주목을 받고, 소금이 될 수 있으려면 젊은 사람이 많아야 해요. 나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젊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경실련 운동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사업이에요. 환경도 그렇고,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황사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민간외교가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를 중국, 일본 등에 있는 단체들과 연대해서 해결하는데 경실련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운동도 부탁하고 싶어요.

하성규 교수가 얘기한 인간중심의 도시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재개발을 꿈꿔본다.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을 쓰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외치던 사람이 먼저인 도시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길 기대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공간이 아닌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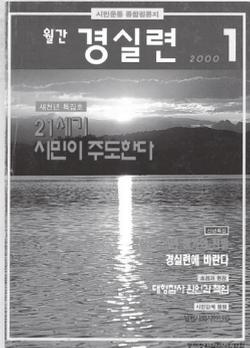
# 월간 경실련 30년 역사(3) 2000~2004년



이번 호에서는 새 천년이 시작되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발행된 월간 경실련을 소개합니다.  
웬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2000년 초반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2000년



2000년 1월호- 지금은 조금 낯선 말 이 되어버린 새천년, 월간 경실련에도 21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3월호- 정당명부제 도입무산... 패스트랙 발의를 두고, 난장판이 된 국회 모습이 생겨나네요.



2000년 4월호- 프로야구선수협회가 만들어질 당시에 경실련이 함께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실련 사무실을 방문했던 송진우 회장의 모습입니다.



2000년 6월호- 16대 총선에서 지역 구도를 극복해보겠다고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故 노무현 대통령의 인터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호- 20년 전에도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을 경고했었네요. 그러나 지금은 위험수위를 넘어도 너무 넘어버린 사이버테러, 과연 해결책은 있을까요?

2001년



2001년 4월호- 투기와 부동산 거품의 땅이 되어버린 판교개발의 시작이 이때 쯤이었네요. 정부는 이걸 보고도 아무런 반성과 개선책 없이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2001년 7월호- 슬픈 이름, 비정규직... 1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은 여전히 슬픈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2001년 11·12월호-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반복되는 뻔한 거짓말!



## 역사 속 그날 이야기

# 1990년 5월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



1990년 5월 11일 한겨레신문에는 “23개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업계 로비에 밀려 감사중단”이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23개 재벌 계열사 비업무용 부동산 43% 추정/감사원 보고서”라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재벌의 로비로 감사원이 진행하던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감사가 중단됐으며, 이들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5월 16일, 검찰은 이 내용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감사원의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합니다. 당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문옥 감사관의 석방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는 여전히 부당한 지시를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2016년 10월 발견된 태블릿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문옥 감사관은 지난한 싸움 끝에 1993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무죄를 축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1996년에서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이문옥 감사관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1~1992년에 경실련에서 경제부정고발센터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거의 30년이 흐른 이 사건은 권력 내부인사가 정경유착의 실태와 조직의 비리를 폭로한 최초의 내부고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문옥 감사관과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도 이들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공익제보자들에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

## 뽕때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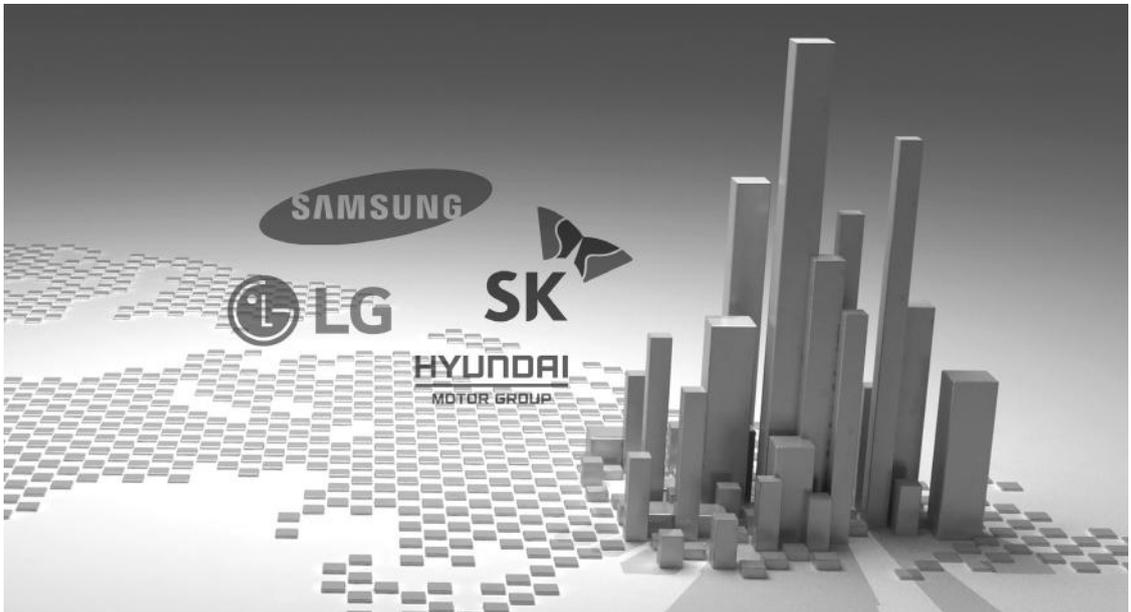


어릴 적엔 세상에 맞서 싸운 용기가 충분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만큼 세상이 받아줄 거라 믿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며 그 용기가 자꾸 작아지더니, 이제는 찾아볼 수도 없다.  
세상보다 사회가 무섭고, 사회보다 사업이 두렵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다.

# 재벌 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김건희 재벌개혁본부 간사  
gun@ccej.or.kr



경실련은 지난 2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의 후속 조사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업종현황을 조사·분석했다.

5대 재벌은 지난 10년 동안 32개 증가한 제조업보다 3.4배가 많은 110개의 비제조업 계열

사를 늘렸다. 5대 재벌의 2007년도와 2017년도의 계열사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분류한 결과, 제조업 계열사는 10년간 88개 사에서 32개 증가한 120개 사였다. 비제조업 계열사는 139개에서 249개로 110개가 늘어났다(1.79배 증가). 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10년간 227개에서 142개 증가(1.62배)한 369개로

〈표1〉 5대 재벌 제조업 및 비제조업 분류

구 분		2007년	2017년	증감	증가배수
계열기업 증가	제조업	88(38.8%)	120(32.5%)	32(22.5%)	1.36배
	비제조업	139(61.2%)	249(67.5%)	110(77.5%)	1.79배
합 계		227(100.0)	369(100.0)	142(100.0)	1.62배

〈표 2〉 지난 10년 5대 재벌별 제조업 및 비제조업 계열사 증감 현황

(단위: 개 사)

그룹	2007			2017			증감 ('17-'07)		
	제조	비제조	계	제조	비제조	계	제조	비제조	계
롯데	17	27	44	25	65	90	8	38	46
SK	12	45	57	33	63	96	21	18	39
LG	15	16	31	24	44	68	9	28	37
현대자동차	20	16	36	23	30	53	3	14	17
삼성	24	35	59	15	47	62	-9	12	3
전체	88	139	227	120	249	369	32	110	142

나타났다. 증가분인 142개 중 제조업은 32개(22.5%)인 반면, 비제조업은 110개(77.5%)로 제조업중 증가분의 3.4배였다. 2017년도 기준 비제조업 계열사는 249개로, 제조업 계열사 수인 120개의 2배가 넘었다.

5대 재벌그룹별 계열사 증가로는 롯데가 46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SK 39개, LG 37개, 현대차 17개, 삼성 3개 순이다. 또한 5대 재벌 중 비제조업 계열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롯데(38개)였고 다음으로 LG(28개), SK(18개), 현대차(14개), 삼성(12개) 순이다.

지난 10년(2007~2017) 동안, 건설·부동산·임대업종은 22개 사가 증가하여 증가 계열사 142개 사 중 15%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사

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를 포함하면 28개 사가 증가해 약 20%를 차지하여, 5대 재벌 계열사 중 건설·부동산·임대업종으로의 진출이 실제 가장 높았음을 보여준다. 5대 재벌의 계열사 중 실제 건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2007년 13개 사에서 2017년 41개 사로 28개, 3.2배가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롯데가 14개 사 증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대차 9개 사 증가, SK 4개 사 증가 순으로 높았다.

5대 재벌의 2017년 기준 토지(땅) 자산은 75.4조 원으로 2007년 23.9조 원에 비해 51.5조 원이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3.2배가 늘어난 것으로, 재벌의 토지자산

〈표 3〉 공시된 업종과 관련 사업 있는 계열사 현황 비교

(단위: 개 사)

그룹	공시된 계열사			관련 사업 있는 계열사			
	2007	2017	증감	2007	2017	증감	증가배수
롯데	3	17	14	4	18	14	4.5
현대자동차	1	7	6	1	10	9	10.0
SK	2	5	3	3	7	4	2.3
삼성	1	0	-1	4	5	1	1.3
LG	1	1	0	1	1	0	1.0
전체	8	30	22	13	41	28	3.2배

〈표 4〉 5대 재벌 소유 토지(땅값) 장부가액

(단위: 조 원)

그룹	2007년 (227개 사)	2017년 (369개 사)	증가액	증가배수
현대자동차	5.3	24.7	19.4	4.7
롯데	6.2	18.1	11.9	2.9
삼성	7.7	16.1	8.4	2.1
SK	3.1	10.2	7.1	3.3
LG	1.5	6.3	4.8	4.2
계	23.9	75.4	51.5	3.2배

증가가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 증가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 2017년도의 토지(땅)자산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현대차가 24.7조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롯데 18.1조 원, 삼성 16.1조 원, SK 10.2조 원, LG 6.3조 원 순이다. 지난 10년 간 증가액 순위는 현대차가 19.4조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롯데 11.9조 원, 삼성 8.4조 원, SK 7.1조 원, LG 4.8조 원 순이다.

5대 재벌 계열사는 2007년 227개에서 2017

년 369개로 1.6배가 늘었고, 특히 계열기업 142개 중 제조업은 32개, 비제조업은 110개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출이 용이하고 내부거래가 편리한 금융업, 건설·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중점을 두고 계열사를 확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공시된 업종을 비롯해 사업내용에 건설·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계열사까지 포함할 경우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는

2017년 기준 41개 사(28개 증가)로 3.2배가 증가해 사실상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5대 재벌이 토지자산을 2007년 24조에서 2017년 75.4조로 3.2배를 늘린 것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되며, 결국 재벌의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토지(땅)자산을 늘렸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재벌의 땅 사재기와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고, 재벌은 본업인 제조업 등을 외면하고 건설과 부동산 임대업 등의 계열사를 대폭 늘렸다. 지난 10년 동안 땅값이 폭등했고, 아파트값 등 주택가격도 폭등했다.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의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했다. 재벌은 앞장서 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동산 투자를 했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늘려왔다. 이를 규제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규제를 풀어 투자를 조장해왔다. 우리 사회의 정보와 자산의 불평등, 기회와 소득과 자산 등의 다중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시급하다.

정부 정책적 지원(세금, 금융, 수출 등)을 등에 업고 덩치를 키운 재벌기업들은 주력사업과 무관한 문어발식 확장과 토지매입에 경쟁적으로 나서며, 더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일정 부분 제한해 왔으나, 출총제는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 2007

년 노무현 정부에서 무력화되었다.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이유로 완전폐지되었다. 현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는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 금지, 지주회사 제도가 있으나 모두 실효성이 없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 자산과 비제조업으로의 집중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출자 계열사)에 출자받은 계열사(피출자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토록 2층으로 출자구조를 제한(단, 100% 출자는 적용 제외)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의 자료를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 및 상시 공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부터 먼저 개정해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개선방안은?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ohoh@ccej.or.kr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는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 방지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라는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그 도입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도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7월 수탁자 책임원칙을 도입하였다. 그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도 있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선동적인 비판도 있었고, 이 원칙으로 재벌 폐해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단편적 이해도 있었다. 그러나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그 내용을 명문화한 스튜어드십코드가 추구하는 것은 명료하다. 기관투자자인 국

민연금이 장기수익률 제고를 통한 국민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절하게 적용하여 기금운용을 하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기준 적립기금이 634조 원으로 일본 공적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금기금에 해당될 정도로 큰 규모를 갖고 있다. 투자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 이르는 최대의 투자자인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산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하여 원활하게 연금이 지급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기간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정부 및 국민연금은 향후 스투어드십코드 준수의 시금석이 될 만한 한진칼 및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서부터 우왕좌왕, 좌고우면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 의도가 의심되는 무리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관련 자료의 오류도 있었다. 근거로 내세운 자료들은 정부와 국민연금 등에서 만든 것이 맞나 할 정도였고, 기본적인 법률검토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듯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조차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경실련은 관련 내용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스투어드십코드 적용 과정에서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관련 규정의 숙지 여부 ▲안전 자료 작성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간의 협의 여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문의 과정 ▲기금운용원칙 및 단기매매차익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다.

국민연금 스투어드십코드 적용에 있어서 상징적인 사례에 대한 감사청구이기도 했지만, 원칙 적용 일반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발표한 자료에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인해 기업가치가 상승한다는 실증적 연구가 많음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기반한 장기적 투자이익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매매차익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부분, 원칙이 있음에도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 수탁자책임원칙 적용에 중요한 자료인 이사 등의 출석률이나 과도한 겸임 이슈 등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거나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 등이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수탁자책임원칙의 적용은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정책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스투어드십코드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한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수탁자책임원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독립적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전제로, 수탁자책임원칙 적용에 있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와 독립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채택한 스투어드십코드와 동일하거나 더 강화된 스투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금융사들만이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벌의 계열사인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들도 소속 재벌이나 총수일가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견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스투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국민연금 등이 스투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하다. 스투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 ☺☺☺

# 분양가 거품 방치하는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 - 북위례 3개 아파트 단지 분양원가 공개내역 분석 결과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2019년 3월 20일을 기점으로 이명박정부 이후 12개 항목으로 축소(기존 61개)됐던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확대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공공택지에 한해서는 법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분양가 거품 인하 등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그간 건설사와 공기업 위주

의 공급제도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을 변화하기 위한 개혁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항목 확대 이후 큰 관심을 가지고 북위례 아파트들이 분양을 재개했다. 위례의 경우 2011년경부터 분양이 시작됐으나, 북위례는 특전사 부지 이전 문제로 3년간 분양이 중단된 상태였다. 올해 1월 북위례 분양이 재개된 이후 위례 포레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 송파 계룡리슈빌 3개 아파트가 분양을 마쳤다.

경실련이 이들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비교분

〈표1〉 북위례 아파트 분양원가 중 건축비 내역 비교

(단위: 만 원/평)

		포레자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건축비	공사비	469	511	389
	간접비	483	223	373
	가산비		178	226
건축비 계		952	912	988
분양일		2019.01	2019.03	2019.04

주)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원가 비공개로 감리자 모집시 공개한 내역임.

석한 결과, 여전히 부풀려진 거짓 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건축비 바자지를 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를 높였지만 주택업자의 분양원가 허위공개와 지자체의 허술한 심사 및 승인으로 북위례 3개 아파트에서만 총 4,100억 원, 가구당 2억 원의 건축비 거품이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관리비가 더 많아

건축비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와 관리비용 등 ‘간접공사비’, 그리고 직접공사비에 추가가 가능한 ‘가산비’로 구성된다. 3개 아파트단지의 건축비는 모두 평당 900만 원 이상이다. 리슈빌의 경우 행정구역상 송파구라는 이유로 힐스테이트보다 20% 비싸게 분양됐는데, 건축비도 평당 988만 원으로 가장 비싸다.

그러나 직접공사비 389만 원, 간접공사비 373만 원, 가산비 226만 원 등 실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는 건축비의 39%에 불과하고, 3개 아파트 중 가장 낮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간접비와 가산비는 평당 603만 원이나 책정했다.

이렇게 공사비보다 간접비를 더 높게 책정한 상태로 송파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송파구청장 승인까지 받았다. 위례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심사대상이다. 건설사가 시·군·구청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하면 해당 시·군·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자치단체장이 공사비에 버금가는 간접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건축비 상세내역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거나, 주택업자에게 막대한 분양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접비 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일반분양시설경비(모델하

〈표2〉 북위례 분양원가 중 간접비 내용 비교

(단위: 만 원/평)

		포레자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최소최대 비율
간 접 비	설계비	8	4	7	2배
	감리비	11	11	11	1배
	일반분양시설경비	18	144	65	8배
	분담금 및 부담금	21	27	3	9배
	보상비	-	-	-	-
	기타사업비성경비	426	37	289	12배
계		483	223	373	

주)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원가 비공개로 감리자 모집 시 공개한 내역임.

〈표3〉 북위례 분양아파트 건축비 거품 추정

(단위: 만 원/평)

	포레자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적정건축비	450	450	450
분양건축비	988	912	952
차액	538	462	502
총액(분양면적 83,859평)	4,116억 8,950만 원		

우스 운영건립, 홍보 등)에 600억 원을 책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 포레자이와 리슈빌은 기타사업비성경비에 역시나 600여억 원의 간접비를 책정했다. 기타사업비성경비란, 제세공과금, 등기비 등이다. 세 개 아파트들의 세부 간접비를 비교하면, 포레자이의 기타사업비성경비는 평당 426만 원으로 힐스테이트(37만 원)의 12배이고, 일반분양시설경비는 힐스테이트가 평당 144만 원으로 포레자이(18만 원)의 8배이다. 항목별로 평당 수백만 원씩 차이나는 비용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심사와 원가공개 승인을 받았다.

### 총 4,200억, 세대당 2억 건축비 거품 전가

공개가 영터리 일뿐 아니라 금액 역시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 경실련이 경기도시공사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의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설계비와 감리비를 제외한 간접비는 평당 평균 17만 원, 최고 20만 원(대우건설)이었다. 최고금액인 20만 원에 감리비와 설계비를 포함할 경우 50만 원의 간접비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

위례 3개 아파트들의 공개된 설계비는 평균 6만 원, 감리비는 11만 원이었다.

이러한 분양원가 부풀림으로 발생한 건축비 거품은 총 4,117억, 평당 490만 원으로 추정된다. 40평 기준 한채당 2억원 수준의 건축비가 부풀려져 주택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15년 동안 준공금액, 원하도급내역, 입찰내역 등의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추정한 적정 건축비용은 평당 450만 원 수준이다. 리슈빌의 경우, 공개한 공사비는 평당 389만 원이며, 여기에 간접비 50만 원을 포함하면 450만 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지난 3월 검단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는 348만 원으로 공개한 바 있다.

### 분양가 거품, 분양원가 영터리 공개, 공공은 무얼했나?

분양원가 내역을 제대로 검증했어야 할 자치단체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책정된 건축비에

근거해 책정됐는지는 검증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리슈빌을 승인한 송파구청은 감리자모집 공고와 입주자모집공고의 원가공개가 크게 차이났다.

아파트 사업비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는 총사업비가 공개되고, 감리자 지정과 입주자모집단계에서는 공종별 원가가 공개된다. 세 종류의 절차와 단계 모두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한다. 그런데 리슈빌의 경우 57개 건축공종 중 45개의 값이 서로 달랐다. 하남시청은 포레사이의 원가공개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아예 누락했고, 힐스테이트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분양가와 분양원가 공개의 금액이 서로 달랐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사들은 엉터리 원가를 자의적으로 산출해 공개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자지단체는 허수아비 심사와 승인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가격이 부풀려지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거품을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엉터리 분양가 심사와 승인으로 분양거품을 방조한 지자체장과 관련 심사위원회

의 허수아비 검증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는 설계도서, 설계내역에 기초해서 산정된 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와 지자체장은 건설사가 책정한 금액이 원가와 맞는지 심사 후 승인해야 한다.

중앙정부 역시 분양가심사에서 기본형건축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본형건축비의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이 북위레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거품을 지적한 이후 국토부는 뒤늦게 분양가 승인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분양거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법정건축비)이다. 2005년 평당 340만 원이었던 기본형건축비는 2019년에 645만 원까지 상승했다. 모양도 질도 알 수 없고 세부내역도 공개 못하는 기본형건축비를 15년간 발표하며 국토부가 제대로 된 원가검증을 방해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됐으나 여전히 길은 멀다.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로는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의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



#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 부동산 투기 유발하고 기존 상인 내모는 특혜 개발 중단해야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nari@ccej.or.kr

최근 세운상가가 재생사업 등으로 새롭게 변모하면서 청계천과 을지로 주변지역이 청년 사업가와 예술가들이 모여 들고 노포 등이 재조명되면서 소위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은 개발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자 오랫동안 청계천 주변의 도심산업 생태계를 이루어왔던 기존 상권은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상인들은 이주나 재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어 폐업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현행 철거 위주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투기를 부추기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없애며 원주민을 내몰아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추가 지정 중단과 기 지정된 지구 해제 등 뉴타운 출구전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

다. 개발 위주 도시정비사업에서 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젠트리피케이션(등지내몰림 현상) 문제 개선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생사업과 재개발사업이 혼재된 세운지역에서는 여전히 원주민 내몰림과 부동산 투기 등 정비사업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중구청에서 고층아파트 건설 등의 용도 변경까지 허용한 것은 사업자를 위한 특혜로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한다는 정책목표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과연 재개발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세운재개발사업의 땅값 상승실태와 상인재정착률을 분석했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 및 지역의 고유한 특성 파괴와 상인내몰림 등 상인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재개발사업 실태를 드러내 민간의 투기사업 중단 및 법제도 개

〈표1〉 세운재개발구역 땅값 상승액 추정

(단위: 천 원/평)

구분		청계천 개발 전 (2002년)	사업시행 전 (2016년)	상승액	비고
공시지가	천원/평	16,740	51,010	34,270	305% 상승
시세	천원/평	28,780	87,740	58,940	공시지가 × 감정평가반영율(1.72배)
	억원	2조 7,670	8조 4,320	5조 6,650	총 면적 약 10만 평

※시세 반영: (감정평가액/공시지가)비율을 적용해 시세 추정

선을 요구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사업활성화를 위한 명목적인 재개발 특혜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필요시 공공의 공영개발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상가를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세운재개발사업의 땅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행인가 전 개발계획 수립만으로 땅값이 5조7천억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3조7천억 원은 순수하게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 토지주에게 지가보상으로 돌아갈 이익으로 추정된다. 땅값 상승 이익은 정부와 서울시의 뉴타운 특별법 제정, 용적률 완화,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변경 등 특혜정책의 결과다.

반면 기존 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대책은 부실해 재정착률은 낮았다. 결과적으로 세운재개발사업은 공공에게 주어지는 공익사업 권한 등의 특권을 이용해 민간에게 불로소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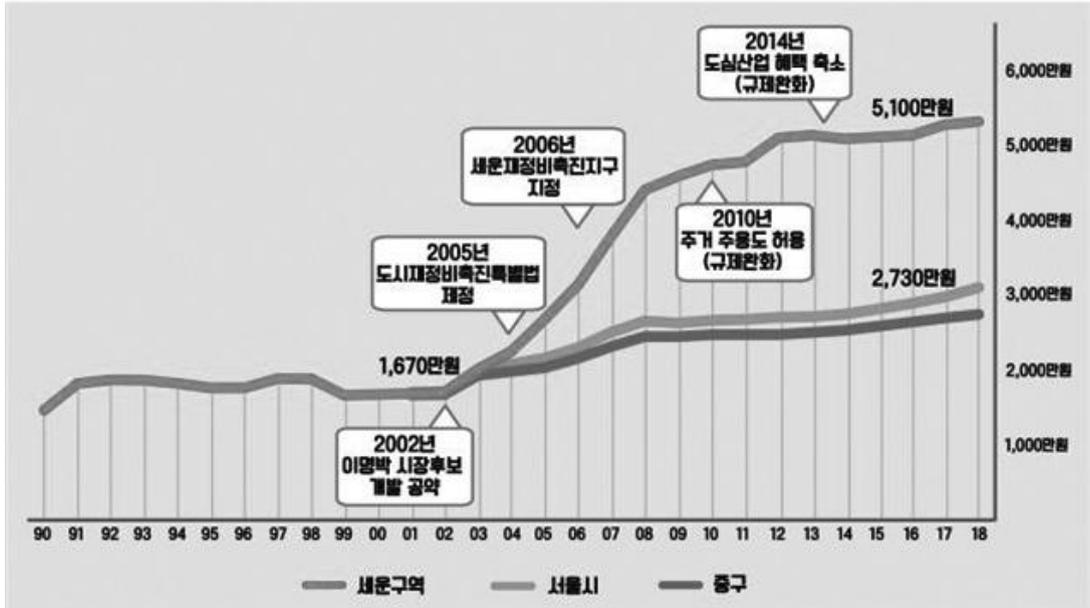
안기고, 상인과 원주민을 내쫓고 투기세력만 배를 불리는 특혜개발임이 확인되었다.

### 이명박 전 시장의 꿈, 청계천 주변 고밀 고층 개발

세운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세운상가부터 중구 진양상가까지 주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구면적은 13만 평(439,456.4㎡)이며, 총 6개 구역에서 171개 구역으로 분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과 주변 개발을 공약화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었다. 2005년에는 뉴타운 개발 광풍에 기댄 여야의 뉴타운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완화, 용적률 및 층고 완화, 건축기준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06년에는 당초 3층 미만, 용적률 150% 내 외었던 세운 일대를 30층 내외, 용적률 900%에 육박하는 빌딩 숲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층고는 약 10배,

세운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공시가격 변화



용적률은 약 6배가 되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가능해졌다. 2010년에 서울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상업업무 이외 주거, 숙박 등의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도심복합용도 지역'으로 변경,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다.

기 위한 도심 특화산업 재수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1/10로 축소했다. 2018년에는 세운 3-1, 3-4, 5 구역의 토지 용도를 상업업무에서 주거용으로 변경, 주거비율 90%까지 허용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 민간에게 더 큰 특혜를 제공했다.

서울시, 기존 상인 재정착 대책은 후퇴시키고, 주거용도로 변경하는 특혜 제공

재개발로 땅값은 3배, 5조6천억 원 상승, 땅값 거품과 불로소득만 3조6천억 원

2014년 박원순 시장은 재선 이후인 2014년 전면철거 예정인 세운상가를 존치하는 재생사업으로 결정했지만 기존 상인 재정착을 유도하

세운재개발지역 개발계획 수립 전후인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했다. 사업이 시작된 2002년 기준 공시지가는 평

균 평당 1,670만 원이다. 이후 청계천공원 조성공사 착공 및 뉴타운특혜법 제정으로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지구지정이 이루어진 2006년에는 평당 3,110만 원까지 상승했는데, 4년 사이 200% 상승했다. 주거 중심의 개발이 가능해진 2010년에는 평당 4,710만 원, 세운상가 존치 및 재생사업 결정 및 상인 재정착 대책이 후퇴된 2014년에는 5,050만 원,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인 2016년에는 5,100만 원으로 3배 이상 땅값이 상승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시세의 30~40% 수준에 불과하며, 6-3-1, 2 구역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공시지가 반영률인 1.72배를 적용해 시세를 추정했다. 2002년 기준 평당 2,880만 원에서 2016년 평당 8,770만 원으로 상승했는데, 땅값 상승액은 평당 5,890만 원이며, 사업지구 전체로 확대할 때 약 5조6,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중구의 지가상승률(연평균 3.4%)을 고려한 상승분을 제외하고 남은 3조5,600억 원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혜로 인해 발생한 거품이고 불로소득으로 추정된다.

### 재개발로 건물면적 늘었지만

#### 상인들은 갈 곳 없어... 재정착률은 18%

세운지구의 건물면적은 현재 26,370평이지만 재개발되면 207,590평으로 8배가 된다. 하지만 상인들이 저렴하게 재입주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지 못했다. 도심특화산업 면적은 1.7% 확보됐지만 별도의 임대료 조건은 없다.

결국 부족한 대체상가 제공과 고가 임대료 부담으로 상인재정착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세운 3-1, 4, 5구역에 대체영업장 확보와 우선임차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자에게 80%의 용적률 혜택을 제공했지만 분양권 또는 임차권을 신청한 세입자는 15%에 불과했다. 2014년 서울시가 도심특화산업 등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겠다고 변경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개발사업인가?

### 서울시는 땅값 거품 키워 불로소득 사유화시키고 원주민 내쫓는 특혜개발 중단해야

노후한 건물과 주거환경을 정비한다는 핑계로 지역의 역사가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다. 영세한 상인들이 일터에서 쫓겨나지만 투기꾼과 토건세력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며 땅값과 집값까지 폭등시키고 있다. 서울시의 마구잡이 개발에 600년 도시의 역사와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제공해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는 막개발은 과거 개발주의 시대의 잔재로 서민과 상인에게는 고통을, 미래세대에게는 부담만 안길 뿐이다.

노후지역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개발방식을 중단하고 서울시가 공기업을 통해 직접 개발하여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정비사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서회원 정책실 간사  
hwseo@ccej.or.kr



## 패스트트랙 정국

최근 국회는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여야4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사이의 충돌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비롯한 4

개 법안의 패스트트랙에 합의하고, 우여곡절 끝에 여야4당이 합의를 각 당에서 추인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4월 25일,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담은 의안 발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점거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 4월 26일, 전자 발의 시스템으로 의안 발의가 완료되었고, 4월 29일에는 4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되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자유



한국당은 “좌파 독재, 독재 타도”를 외치며 국회를 점거하고, 다른 의원을 감금하는 등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 165조 위반이었다. 패스트트랙 지정 완료 이후에는 원외 투쟁에 나섰다. 광화문 농성에서 “패스트트랙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 우리 헌법,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기도 했다. 국민은 정치의 개혁을 바라지, 정치의 퇴행을 바라지 않고 있음에도, 다시금 이념 공세를 펼치며 개혁의 반대편에 섰다. 이는 “개혁정신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는 몸부림”으로 보였다.

### 패스트트랙 전선

현재 국회 안팎으로 패스트트랙 전선이 형성되었다. 패스트트랙 전선이 형성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촛불의 정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20대 국회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에서 국민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위임적 민주주의(delagative democracy)를 넘어서자고 함께 외쳤다.<sup>1)</sup>

하지만 촛불 이전 형성된 제20대 국회를 구성

한 정치세력들이 모두 다 이러한 촛불정신에 찬동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에 촛불 이전에 형성된 제20대 국회와 촛불 사이의 간극이 더해졌다. 이로 인해 제20대 국회에서 촛불의 요구를 입법화하고자 하는 개혁 세력들은 촛불의 요구를 실제로 입법화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들은 국회 밖에서 추동력을 찾던 중 패스트트랙이라는 출구를 찾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와 ‘대화 거부’에서 비롯됐다. 사실 역설적이게도, 패스트트랙 정국을 불러온 것은 선거법,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여야4당이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개혁 법안 논의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지연시키고자 했다. 어렵게 출범한 정개혁위·사개혁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개혁법안을 논의하기는커녕 논의의 진척을 막아 시민사회로부터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데에 서명해놓고, 당리당략에 따라 협상을 원천무효로 돌렸으며, 시대에 역행하

1) 오도넬(O'Donnell), 루쉬마이어(Dietrich Rueschemeyer) 등이 개념화한 위임 민주주의 중의 하나임. 최고 통치자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지만, 일단 선출만 되면 모든 권력이 통치자 1인에게 위임되고, 집중되는 제도화 이전의 민주주의

는 비례대표제 폐지, 공수처 반대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의원 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급기야 개혁법에 대한 색깔 입히기를 시작하고 나섰다. 선거법은 “좌파 독재를 위한 것”, 공수처법은 “청와대 직속 수사기관”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세 번째 요인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들에 대한 국민적 호응에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등이 지지부진했음에도 국민들의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고 오히려 더욱 뜨거워져만 갔다. 또 이러한 안건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점점 더 커져갔다. 리얼미터 여론조사(3월 14일자)에 ‘여야 정쟁으로 막혀 있는 개혁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이 50.3%로, ‘여야 합의와 법안 심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므로 반대한다’는 반대 응답(30.8%)보다 19.5%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차 리얼미터 여론조사(3월 25일자)에서도 ‘여야 정쟁으로 막혀 있는 개혁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이 1차 조사 대비 4.0%p 증가한 54.3%로 증가했다. 또 국민들은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표로써 심판하기로 기다리기보다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나서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향후 패스트트랙의 향방**

패스트트랙이 지정되고 나서도 선거법·공수처법 등이 통과되려면 무려 330일의 시간이 걸린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80일 이내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에서 각각 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선거법을 의결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안건조정 신청이 있어 안건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기간을 더 단축 가능
9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본회의 상정 전 60일은 국회의장이 의지로 단축 가능

패스트트랙 지정은 각 절차의 마감일(deadline)을 지정하는 것일 뿐이기에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들도 다른 법안들과 같이 표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의 향방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들어오는 시나리오, 330일 동안 지금 국회를 둘러싸고 형성된 전선(여야4당 대 자유한국당)이 계속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전선이 흐려지는 시나리오 등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른 경실련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우리에게 던진 화두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우리에게 던진 화두**

87년 민주화 이후로 30년 만에 패스트트랙을 추동력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학계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바라보는 매우 상반된 시선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게임의 룰



을 정하는 선거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다른 한편, 비례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일보 전진, 아니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전진이라고 평가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다른 한편, 국회가 연동형도 아닌 ‘준연동형’, 그리고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 등 후퇴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정국으로 흘러갈 때까지 시민사회단체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비판도 있다.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가 하나 있다. 그것은 “정당들 간에 합의가 안 된다면, 개혁을 포기해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해 비례민주주의연대의 하승수 대표는 정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았어도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헌법 제49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정당 간의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심이고 표심이며, 패스트트랙은 최종 표결이 아니라 안전 상정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정당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의 표심과 민심에서 찾을 수만은 없는 측면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한 정당성은 정당 간 합의에 우선한 국민의 민심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대화 거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sup>2)</sup>



내용상으로도 고민할 거리가 남아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이 시민단체가 요구한 안과 100%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100% 연동형이 아니라 50% 준연동형에 불과하며,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법은 기소권이 없어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고,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앞으로의 방향

그동안 경실련이 참여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한다는 ‘연동형’의 취지를 온전히 담아내는 방안에 대해 소극적인

2) 20세기 독일 합리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 의사소통 행위 유형을 전략적 행위와 소통적 행위로 구분한 바 있다. 전략적 행위는 하나의 입장을 고수하는 행위 양식인 반면, 소통적 행위는 ‘상호양해(Verstehen)’에 기반을 둔 행위 양식이다. 상호양해는 언제든지 타자와의 소통행위를 통해 자신의 기존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반대’라는 포지셔닝을 취하고, 형식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현재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태도를 보인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던 터라 <공동행동>은 여야4당이 이해타산에 따라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패스트트랙 전선이 형성된 이상 경실련은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맞춰 좀 더 면밀한 대응 전략을 짜나아가야 한다. 먼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는 경우(시나리오1),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이 작년 2018년 12월 15일 합의에 기초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둘째,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할 경우(시나리오2), 4당이 추가 협상을 통해 온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석수 확대 등을 포함해 수정안을 만들어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는 경우(시나리오3), 형성된 선거제도 개혁의 추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정치체제의 개혁적 측면을 밝혀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분단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의 역사적 유산인 “좌파 낙인찍기” 등을 답습하며,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한 이념 공세를 펼치는 데에 대응해 합리적인 목소리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개혁성을 알려나아가야 한다. ☺☺

#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조성훈 정책실 간사  
reunification@ccej.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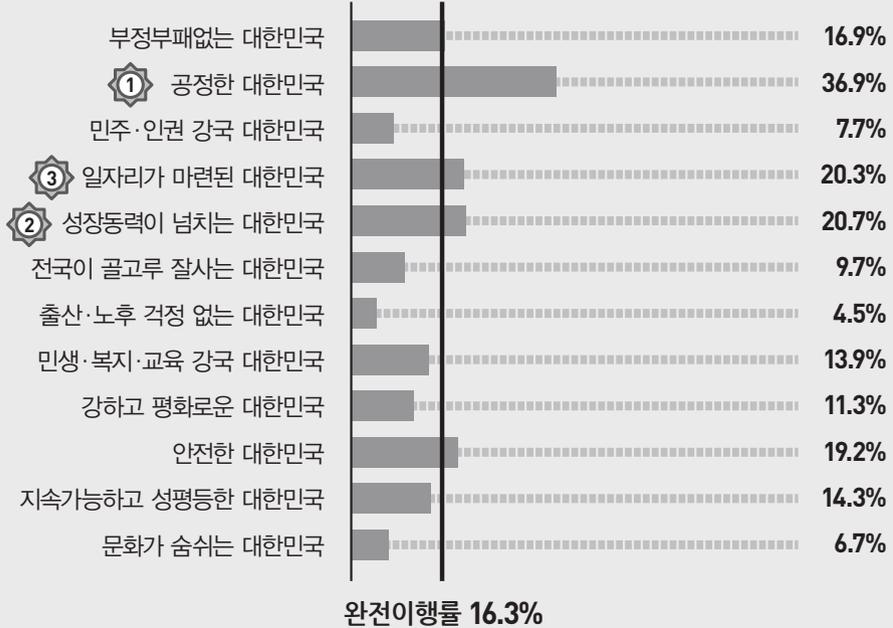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공약 이행 평가 및 정책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얼마나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와 2년간의 정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함께하는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4대 비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공약을 제시하였다. 평가를 위해 경실련은 각 부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며, 부처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등 전반을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 2년차 공약 이행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체 1,169개 공약 중 완전이행 공약은 191개로 16.3%에 불과했다. 지난 1년차의 12.3%에 비해 4% 정도 증가된 수치로 나타났다. 완전이행만 놓고 보면 매우 저조한 수치였다. 완전이행도가 낮은 것은 여소야대로 인해 법안 통과가 어

려운 상황으로부터 기인하지만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가 높지 않은 것도 큰 요인이라고 보았다. 현재 다수의 공약이 검토 또는 계획 수립 중으로 나와 있으며 국회에 법안만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16.3%의 공약이행률은 지난 박근혜 정부 2년차 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공약수는 문재인 정부의 절반 수준이며, 공약의 방향성도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할 필요가 있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44.7%로 가장 높은 이행을 보인 영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이다. 부분이행까지 합치면 9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육성' 영역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개혁보다는 상당수가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아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높은 수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경제구조의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이행도



부분이행이 높은 영역은 89.1%의 '살기 좋은 농산어촌', 84.0%의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81.3%의 '주거문제 해소'로 나타났다. 이 중 주거 분야는 수치로는 높은 공약 이행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서민들의 실제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공약 이행을 수치만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야 했다. 공약의 방향성이 잘못되었거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감하게 전문가와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수용해 전환하는 자세도 필요

해 보였다.

세부 의제로 살펴보면, '경제민주화' 공약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 행위 근절 등 핵심 조항이 빠지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수단들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공약 이행률보다 실제 이행에 따른 효용이 낮으며, 재벌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이에 성공적인 재벌개혁을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공약에서 빠진 내용의 추진을 위해 강한 노력이 요구된다.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의 실제 삶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총 5개 분야(저출산·고령화 대책,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주거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는 평균 완전이행률이 5.1%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이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체감을 낮게 만들 수 있기에 국민의 실제 삶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 이행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미진한 국정 운영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우선 국정운영 분야에서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임기 초반과 달리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는가의 문제는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지 않고 성공한 정부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조 위원장은 긴박한 정치적 상황에서 집권하였다는 문재인 정부의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이제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은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정책을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공약 자체도 실효성에 의문이었으나 이마저도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상법개정안보다 더 효과적인 비지배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규칙을 거래소 상장규칙

에 도입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작년 은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하며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집권 1년차 강하게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사실상 포기로 간주하며, 예타 면제를 통한 대규모 토건경제 추진과 경제구조 개혁에 무관심을 사례로 들었다. 박 위원장은 단기적 성과주의에 집착하게 되면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공정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촛불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실패한 정책을 손보지 않았으며, 토건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18개월 동안 약 1천조 규모의 거품이 추가로 발생하며 서민 고통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본부장은 고장난 금융 시스템을 고쳐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아야 하며, 고장난 아파트 분양과 공급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며,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해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토론에서는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해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핵협상의 막을 올리게 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서 드러났듯이 중재자 역할에 한계를 보여줬다고도 평가했다. 앞으로 북미협상이 정체되고 한반도 정세가 정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 분야에 대해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 발표를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개혁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개혁정책 후퇴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목표와 원칙, 전망에 관한 청사진이 부족하다며 정권 초기 급하게 만든 주거복지 로드맵을 국민

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언론·소통 분야에서는 임광기 SBS 논설위원이 진단했다. 임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소통을 다시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소통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촛불시민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홍승권 가톨릭대 의대 교수가 발표했다. 홍 교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감하게 국가와 공공의 역할을 바탕으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재정적 보조와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을 촉구했다. 

# 인보사 사태, 식약처 할 일 했으면 없었을 일

최예지 정책실 팀장  
cyj@ccej.or.kr



▲ 출처: 코오롱생명과학

지난 3월 31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골관절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약 성분 중 일부가 연골세포로 시판 허가를 했는데 신장세포였다라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A로 알고 허가를 내주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B라는 이야기다. 아이가 바뀌었다는 막장 드라마 스토리보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다.

식약처가 자기 할 일만 했더라면 없었을 일

이번 인보사 사태에서 원인 제공은 제약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있다. 성분 변경이 의도적이었는지 단순 실수인지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또한 성분 변경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제약사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지도 따져볼 문제이다. 성분 변경 사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코오롱

생명과학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성분 변경으로 인한 의약품의 효과성, 안전성 등 인보사에 대해 재점검하여 허가 유지 여부도 다시 심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언론보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2년 전 변경 사실을 알고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식약처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제약사의 잘못과 실수를 바로잡고 관리 감독하는 게 바로 식약처의 역할이다. 인보사 사태에서 보듯이 식약처는 임상시험, 시판 허가, 환자 처방까지 10여 년 동안 의약품의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않았다. 10여 년 동안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교차확인, 제3자 확인은 하지 않고, 제약사가 제공하는 서류만 신뢰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중앙약심위 심의 결과에서 인보사가 효과성이 없었다는 결과였는데, 심의 위원을 교체한 후 효과성이 있다고 반복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허가 이후에도 사후관리는 전혀 없었다. 이는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할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번 인보사의 성분 변경도 미국 FDA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밝혀졌다.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의 느장 대응도 문제였다.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이 알려진 게 3월 22일이었는데 식약처는 9일이나 지난 3월 31일에 금지조치를 내렸다. 9일 동안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존재한다. 의약품 사고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격탄이므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9일이나 지체했다. 이를 두고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의 규

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법」 통과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법은 3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됐지만, 판매금지 이후 4월 5일에 열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처럼 인보사 사태는 식약처와 제약사의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닐지 의심될 정도로 관리 감독기관이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결국 식약처가 할 일만 제대로 했으면 없었을 일이다.

### 무분별한 바이오산업화가 만들어 낸 괴물

인보사 사태는 갑자기 생긴 단편적 실수가 아니다. 과거부터 지속해온 바이오 의약품의 규제 완화, 친산업 정책이 쌓이고 반복된 결과물이다. 인보사의 경우 과거 정부의 바이오 유망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참여정부 때는 바이오산업화의 방안인 '바이오 스타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바이오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으라는 지시에 특별한 의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가세포 치료제의 연구자 임상시험자료 또는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를 임상시험의 자료로 갈음하는 규제 완화를 실시했다. 이후, 줄기세포 치료제가 전세계 최초로 허가가 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인보사는 바이오업체 개발 지원을 위한 마중물 사업 중 하나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지정하고, 바이오산업을 통해 경제 발전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의 취임 일성도 제



약사와 바이오산업 발전이다. 정부는 최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하여 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실증 특례'라는 변칙을 통해서 의료행위, 의료기기에 대해 시험검증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실증 특례가 의약품까지 확대 되는 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바이오산업의 편익을 봐주는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하거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책의 기초 속에서 식약처는 앞장서서 수십년간 국민의 안전보다는 제약사의 편익을 봐주고, 최초라는 타이틀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바이오산업 정책이 과거 줄기세포 치료제 사태, 인보사 사태로 반복되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흐름과 식약처의 본분을 망각한다면 제2, 3의 인보사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

전을 저당잡아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발전'이라는 그릇된 꿈에서 깨야 한다.

### 식약처는 각성하고, 국민 안전 위협하는 규제 완화 재고해야

앞으로 할 일은 명확하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식약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 치료받은 환자에게 대한 추적검사 등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각성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의 본분을 잊지 말고 제약사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바이오산업 발전이라는 핑계로 거대한 밀물처럼 밀고 오는 의료 바이오산업의 친기업적인 규제 완화도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 ☹☹



# 기업이 법에 적용받을지를 결정하는 황당한 자동차 레몬법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raid1427@ccej.or.kr



▲ 자동차 레몬법의 빠른 적용과 소급 촉구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업체를 방문하는 서희원 정책실 간사, 하성용 자동차TF 위원장, 오길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윤철한 정책실장(좌측부터)

레몬법은 오래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법이다.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한다. 자동차는 우리가 구매하는 가장 고가의 제조물이다(법적으로 주택·건물은 부동산으로 제조물이 아님).

또한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구조적·기계적 결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심각한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



준에 의해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이런저런 핑계로 교환·환불을 거부하기 다반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법적 강제력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그나마 있는 자동차 리콜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리콜은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교환·환불이 아닌 간단한 부품 교환이나 수리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신차의 하자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오던 자동차업계의 관행에 대하여 많은 잡음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큰 파장을 일으켜 사회적 문제로 공감된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면 교환 또는 환불 처리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아주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가 지금껏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불량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었다. 오랜 논란과 논의 끝에 지난 20년간 소비자의 바람이 실현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 것이다.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나,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대상에 포함하였다.

**2.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 기한**

하자 차량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3.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 ① 하자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 ②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 ③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2만 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 ④ 하자 차량 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사 등에게 통보할 것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4. 하자의 추정**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 하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입증한다.

**5.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토교통부에 법학, 자동차, 소비자 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중재를 진행한다.

**6.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판정의 효력**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한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여러 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안전 우려나 경제적 가치가 명백히 훼손되는 경우,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신청과 결정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환·환불 요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해외의 레몬법에 비해 까다롭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법은 시행됐지만, 강제성이 법 적용을 업체가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강력한 레몬법을 시행해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1975년 레몬법을 도입한 미국은 하자나 결함이

있는 신차를 판 회사는 소비자에게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미국 외에도 유럽, 캐나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국이 아닌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자동차 생산 역사가 우리보다 짧은 중국에서도 2013년부터 '수리·교체·반품을 책임진다'라는 '삼포법(三包法)'을 시행하고 있다. 모두 업체의 선택이 아닌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

이처럼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많은 업체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3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하여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에 포함한 날짜와 레몬법이 적용된 날짜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그 결과, 레몬법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는 국산차는 현대(제네시스 포함),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이며, 한국GM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수입차는 비엠더블유(BMW),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9개 브랜드다. 혼다와 포드·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상반기 중 적용하겠다고 답변해왔다.

경실련은 레몬법 수용과 빠른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4월 11일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드의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



▲ 벤츠코리아 관계자(위)와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 업체 관계자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하성용 자동차TF 위원장

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서한을 전달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매출 4조 4,743억 원, 70,798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27.2%

의 점유율을 기록한 수입차 1위 업체다.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2018년 총 28,055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벤츠와 BMW(19.4%)에 이어 10.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 3위 업체다.

경실련이 지난 3월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 수용을 촉구한 이후, 앞서 이야기한 혼다와 포드, 링컨을 비롯해 한국GM,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캐딜락 등 국산차 1개와 수입차 8개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GM과 캐딜락은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레몬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한국GM과 캐딜락은 4월 1일 출고 및 계약부터 적용받는다라는 사실이다. 올해 1월부터 레몬법이 시행됐지만, 1월 또는 1월에서 3월에 구매한 소비자는 레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레몬법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거나, 미수용한 업체가 나중에 수용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업체의 일방적 방침에 의해 소외되는 소비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소비자를 계약 시점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레몬법 적용 시행	레몬법 적용 예정	레몬법 미수용
국산차	현대(제네시스 포함), 기아,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	-
수입차	BMW, MINI, 재규어, 랜드로버, 인피니티, 닛산, 토요타, 렉서스, 볼보, 캐딜락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혼다, 포드, 링컨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소비자는 결함 있는 불량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자격이 있으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이미 많은 수의 기업들이 레몬법 조항을 적용해, 하자 있는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보장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기반한 자동차 판매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오만한 판단이며, 소비자를 조롱하는 행태다. 레몬법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시작된 법적 논의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미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제를 차용하여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도 동일한 자동차를 미국 등 해외와 우리나라에 동시에 판매하면서, 미국의 레몬법은 수용하고 우리나라의 레몬법 조항은 거부

한다면 이는 국내 소비자를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자동차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장 고가의 상품이다. 하자나 결함 있는 제품의 교환·환불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기업의 의무다. 조속한 레몬법 조항의 적용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그 적용 시점은 레몬법이 시행된 시점의 판매·출고된 신차로 소급되어야 한다. 국내의 소비자를 상대로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현행 레몬법의 맹점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레몬법 적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입법 취지에 부응해야 한다. ☺☺☺



# 경실련과 함께 걷는 길

[회원가입] (FAX) 02-741-8565 (e-mail) member@ccej.or.kr  
[전화문의] 회원팀 02-766-5627

## 회원정보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름

(단체 및 법인명)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원하시면 주민번호 기재)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우편물 수령지)

가입동기  추천 (추천인: )  
 토론회, 행사 (행사명: )  
 인터넷, SNS  기타 ( )

## 회비납부 방식

(CMS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택1)

CMS 계좌이체  신용카드

예금주  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 불가)  카드번호

출금은행  유효기간 월/ 년(숫자4자리)

### 생년월일

출금일  10일  20일  25일

### 월납부금액

개인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기타( )원

법인 (매월)  5만원  10만원  기타( )원  
(일시)  60만원  120만원  기타( )원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회비 수납
- 수집항목(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부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 (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자필 필수)

## 증액 신청서

경실련 회원님, 회비를 증액해 주세요!

이름  소속

회비증액 현 회비에서 ( )원 증액합니다.

정보갱신 (변동사항 있는 경우만)

연락처

E-mail

주소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일 20 년 월 일

# 청년 농업인 육성, 지역 차원에서 논의해가자

김기흥 농업개혁위원회 위원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kimkh@cni.re.kr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농업인 홈페이지 캡처

최근 청년층 육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청년과학자(과기정통부)가 언급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경제(고용부, 복지부)나 공정경제(기재부)와 관련해서 청년층 창

업이 주목받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을 2019년 중점과제 중 첫 번째로 언급하면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미 2017년에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 농업인 1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매년 1,200명 규모로 선발하고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다. 그 한 해 전에는 청년 귀농 창업 1만 가구를 달성하겠다는 귀농귀촌지원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층 유입에 나서고 있다. 이주 청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곳부터 하우스 지원, 농지 임대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해당 지역으로 유인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 농업인 육성은 왜 필요한가. 나는 왜 청년 농업인에 주목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하려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4년 3월, 15년의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해서 충남연구원으로 오기로 결정한 것은 유기농업의 메카 홍동마을(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유기농업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렇게 홍동 유기농업의 실천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 홍동마을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맞이하게 된 현실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홍동면 문당리의 초창기 유기농업 실천 농가들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었고, 이곳 홍동에서조차 유기농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나타났다. 유기농 농사를 짓지 못해서, 밭길 친인척이 근처에 없어서 위탁 형태로 진행하면 업체가 유기농업적인 방법을 고수하지 않고 대형 기계로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유기농가의 고령화 문

제는 그래서 더 치명적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곳에 정착했거나 혹은 이주하려고 하는 많은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의 역할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적어도 홍동마을로 이주 혹은 정착을 결정한 것은 유기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먹거리에 대한 생각과 그렇게 반영된 삶의 방식을 추구해서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더 붙여 마을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자극적인 문구가 아니더라도 농촌에 사람이 없으면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 즉, 약국이며 의원이며 미장원, 치킨집 등이 사라지게 되어 살기가 더욱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정 정도의 인구 수는 있어야 마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인구의 과소화 문제에 대한 대안은 결국 보다 젊은 청년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년 농업인은 어떻게 구분되며 무엇을 꿈꾸는가. 그렇게 홍동에 몇 달 살기도 하면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농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식으로 땅을 임대해 꽤 큰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도 있었고, 농지를 구하기 힘들어 겨우 얻게 된 산기슭에서 뜻이 맞는 친구들과 이것저것 생산해서 SNS 홍보로 직거래를 하기도 하고, 아직 전혀 혼자 시작할 수준이 아니어서 또래와 함께 협업의 방법으로 이제 막 농사를 배워보는 단계의 친구도 있었다. 반대로 애초부터 부모님의 생산 기반을 물려받아 상당한 규모에서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여럿 되었다. 그럼에



도 다들 어렵다는 농업이 처한 실정 앞에서도 농업에 큰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농업과 함께 하겠다고 꿈꾸고 있는 공통된 목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 생활과는 다른 농적인 삶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비전 역시 비슷했다. 여기에 아직은 돈도 땅도 없어 기약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농사를 짓겠다고 막연히 꿈꾸는 단계인 잠재적인 청년 농업인 역시도 같은 생각으로 농적인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청년 농업인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이러한 청년 농업인에게 필요한 것으로는 농적 기반이 없는 경우 농지 확보 문제나 주거지 문제, 멘토 등이 있으며, 부모로부터 승계 받은 후계농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갈등 해결이라는 특별한 사항 외에도 역시 향후 농지 확보 문제와 농업 기술이 아니더라도 배움이 가능한 멘토의 필요성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

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 단위에서 논의하고 고민해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농업·농촌 부문에서 고령화와 과소화 문제를 먼저 겪어온 일본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사람’과 ‘농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농지 플랜’을 통해 향후 지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 지역에 고령화된 농가는 얼마나 존재하고, 농지는 얼마나 남을 것인지 등을 논의하여 새롭게 들어온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더불어 빈집 정보도 공유하고 있으며 판로 역시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농지 플랜이 준비된 지역에 새로 유입된 청년이 농업차세대인재 투자기금(예비 2년간, 경영개시 수 5년간 총 7년간 연간 150만 엔을 지급하는 (구)청년취농급부금)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사업과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지역의 농업과 농촌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논의하는 일이 시작되면 좋겠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지역민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장 등 지역 관계자가 중심으로 구성된 농업위원회와 같은 협의 조직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그저 농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성 아래 형성된 농업 방식과 생활양식이 함께 지역에서 지켜지고 계승되는 지역농업의 개념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세운 1만 청년 양성은 필요한 곳도 실천해낼 곳도 지역밖에 없다. ☺☺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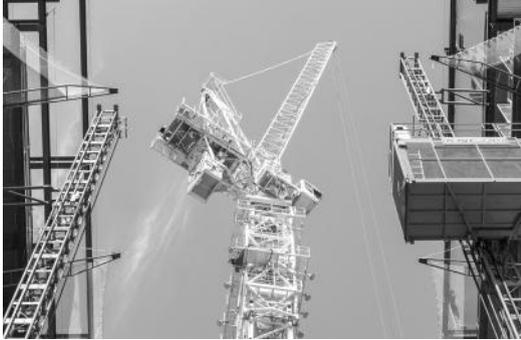
# 욕먹을 각오로 쓰는 타워크레인 이야기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bansug5@ccej.or.kr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시민안전감시위원회는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작년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발생하는 대규모 인명사고가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한 무인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이슈다. 타워크레인은 건축 자재를

높은 곳까지 운반해주는 건설기계장비다. 타워크레인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타워 조종사가 운전석에서 직접 조정하는 유인 타워크레인. 다른 하나는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외부에서 조종기로 운전하는 무인 타워크레인이다.



무인 타워는 시가지 주변 건설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필자 집 근처에도 다세대주택 공사와 관공서 공사가 한창인데 두 현장 모두 3톤 미만의 무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무인 타워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무인 타워는 전문 조종사가 필요 없어 장비 운영비가 적게 들고, 누구나 밤낮없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기간 단축은 공사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문 조종사 없이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발주자나 원청건설사뿐 아니라 하청, 재하청 업체들도 무인 타워크레인을 선호한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은 모두 하청공사로 이뤄진다. 타워크레인도 마찬가지다. 원청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하청을 주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타워를 현장에 공급하고, 노조를 통해 조종사를 수급한다. 원청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건비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지급하는 돈은 한 달에 200~300만 원 남짓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하청, 재하청업체들이 지급한다. 하청업체가 타워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돈은 정식

계약을 통한 임금대가가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유인 타워크레인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타워크레인은 하청업체 중에서도 주로 골조업체와 일한다. 골조업체는 타워크레인이 없으면 작업 자체가 안된다. 자재 인양이 제때 안되면 골조업체에 속한 수십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안 되면 후속 공종인 전기, 설비업체도 허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골조업체 소장이나 반장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눈치를 많이 본다.

문제는 더 있다. 골조업체야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일정 금액과 시간 외 수당을 지불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사용 횟수가 적은 다른 공종, 일테면 건축, 방수, 미장 등의 업체는 회당으로 운반 비용을 치른다. 직접 돈으로 주지 않는다면 조종사들에게 식사나 술을 사주는 식으로 비용을 대신 치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건물 공사는 대다수가 무인 타워크레인을 쓰고 있다. 요새는 아파트 현장에도 무인 타워크레인이 쓰인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무인 타워크레인이 유인 타워크레인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이유 등으로 무인 타워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무인 타워크레인이 늘어나는 만큼 타워 조종사 일자리는 줄어

든다.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돈.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눈 먼 돈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원래는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아니었을까. 필자는 이 불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타워 조종사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밖의 일이고 그에 따른 대가는 당연히 있어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그 대가를 원청 건설사 혹은 계약을 맺은 임대업체에게 받아야 하는 게 정상이다.

필자의 짧은 식견으로는 직접시공제가 답이다. 타워 조종사도 노동자다. 일한 만큼 대가

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적절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하청업체, 재하청 반장으로부터 임금을 보장받는 건 건강하지 못하다. 건설현장의 원청으로부터 적정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워 조종사도 원청건설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타워 조종사의 일자리도 보장되고, 건설현장도 훨씬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건설노동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다. 외환 위기 이전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대부분 건설사 중기사업소 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000



# 현산어보를 찾아서

노건형 기획연대국장  
infocore@ccej.or.kr



현산어보를 찾아서? 한 10여 년 전에 아버님이 암 투병을 하면서 형제들이 병 간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서울이라 저는 주로 주말 간병을 맡았는데 여동생이 시간이 잘 안가니까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렵고 두꺼운 책을 사서 한참도록 읽어야겠다며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다, 언뜻 <현산어보를 찾아서>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산어보? 뭐지? 옛날 국사시간에 정약전의 <자산어보>라는 책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더군요. 살펴보니 역시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해설한 책이 맞았습니다. 총 5권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시에는 4권까지만 나왔기에 4권을 전부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저는 공대생 출신이라 문학이나 인문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없을 예정입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도 시험에 나올까 봐 저자와

책 이름을 외운 것이지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 이 책을 읽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책 제목을 보면서 우선 궁금했던 것이 “왜 자산어보가 아닌 현산어보일까”였습니다. 책을 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약전은 유배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약전이 유배를 간 흑산도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였으며 흑산도의 한자는 黑山이나 그 느낌이 어둡고 처량하여 매우 두려운 느낌을 주었기에 가족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항상 兹山(자산)이라고 표현했답니다. 兹자가 김다는 뜻을 가질 때는 ‘자’가 아닌 ‘현’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오늘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이 각종 상을 휩쓴 좋은 책이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되도록 베스트셀러나 수상작품은 잘 안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읽고 좋아야지 남들이 판단한 책의 경우 읽고 후회한 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학생도 아니고 굳이 책을 통하여 지식을 쌓으려고 구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을 때울 요량으로 구입하기에 그 목적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진짜 읽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책을 금방 다 읽어 버릴까봐 조바심이 날 정도였습니다. 둘째로는 평범한 어류도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산해경>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본 적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책들은 어떤 것들을 소개할 때 반드시 중국의 책자를 인용합니다. '중국에서 정설이면 그것은 반드시 진리다!'라는 의식이 팽배했던 유교문화권 시대에서 정약전의 <현산어보>는 유배생활을 한 흑산도 주변의 어류, 조류, 해초류 등 정약전 본인이 직접 보고, 관찰, 필요시 해부까지 하면서 책을 완성하였으며 한술 더 떠 약재로 쓰는 방법과 조리 및 요리방법까지 적어놓은 실상은 '흑산도 서바이벌 안내서'였던 겁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이점은 작가(이태원)의 굉장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맞는 제목은 <현산어보를 찾아서>가 아닌 <현산어보, 사실이나?>가 될 듯 싶습니다. 이 책의 서술형식은 우선 해당 어종에 대한 <현산어보> 내용을 설명한 뒤 작가가 20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실인지 검증작업을 합니다. 작가 역시 정약전과 마찬가지로 주변 마을 주민 또는 섬 주민들의 면접과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검증하고, 사진 등의 기록물 형태로 책자에 소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 등으로 사실확인

작업에 꽤 애를 먹은 경험도 하게 됩니다. 200년 전에도 희귀 동물이었던 돌고래 비슷한 어종(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의 경우 확인 작업을 포기하려다 우연히 죽은 사체가 떠밀려 온 것을 보고, 마을 주민들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정약전 시대의 어종 명칭이 현 시대와 달라, 모습, 형태, 습관 등을 관찰하며 유추하기도 하지요. 작가가 단순히 글을 옮기는데 치중한 것이 아닌 정약전의 최소 60% 정도의 노력을 하면서 책을 썼다고 판단되네요.

이 책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복어, 오징어, 송어입니다. 복어의 경우 참복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매년 산란기에 한강에 올라올 때 왕명으로 먹지를 못하게 하였답니다.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복어를 먹고 죽었기에 왕이 명을 내렸다고네요. 그런데도 왕명을 어기고 죽을 각오를 하고 먹을 정도로 맛있었다고 합니다. 송어는 정약전이 자신있게 말하기를 송어알이 최고의 술안주라고 표현합니다. 오징어의 경우 작가(이태원)가 검증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흑산도에는 오징어가 잡히지 않을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갑오징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전이 살았던 당시에는 갑오징어를 오징어라고 불렀고 요즘 시대의 오징어는 꼴뚜기라고 불렀다고네요.

사실 저는 5권은 아직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생활 정리하면서 책이 유실이 됐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머릿속에서 한참 떠나 있다 우연히 기억이 다시 나는 책이었습니다. 책 소개를 하면서 내심 다시 한 번 사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읽어서 후회는 되지 않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

# 경실련과 함께 해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 경실련은

- 정부보조금 0%, 회비로만 운영됩니다.
-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경실련 회원이 되면

- 격월로 월간경실련을 보내드립니다.
- 회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SNS에서 많이 본 이슈

### ■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물러가라!

지난 4월 25일 국회는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의를 놓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00석이 넘는 의석을 보유한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소수정당의 의원을 감금하고,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일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개혁은 멀리하는 국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 ■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2019년 4월 19일 조선일보 A4면에는 <경실련 토론회 “민주당, 중남미형 좌파 정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는 전날 있었던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왜곡하여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중남미형 좌파정당’으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정정보도를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개의 언론사에서 그 내용을 사실처럼 받아서 쓴 칼럼이나 사설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 왜곡된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전자 비전 선포식 참석에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선의와 다르게 부적절한 의도와 경제현실 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과거 개발 독재시대의 재벌 중심 정부주도형 성장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있고, 그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인이 충분한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혁신성장이 이루어지려면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다양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혁신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으로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mailto:news@ccej.or.kr)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withccej

전화번호 02-766-5627~5628



#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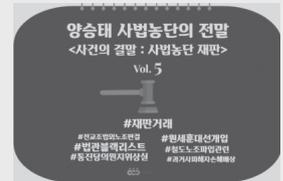
- 03.22 • [분석발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자산 신고 가격 시세 60.4%에 불과
- [성명]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03.25 • [성명] 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 [기자회견] 의료민영화-보건의로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하라

- 03.26 • [논평]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 제 기능 수행 못해
- [성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라

- 03.27 •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과 공식만남은 재벌개혁 포기 선언
- [논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 부결은 기업가치 주주 가치 훼손에 따른 당연한 결과
-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5)



- 03.28 • [기자회견]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성명] 최정호, 조동호, 진영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기자회견]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성명]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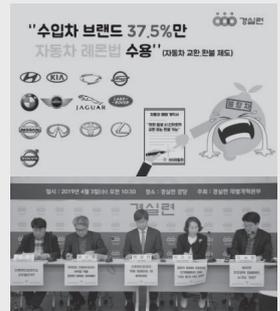
- 03.29 • [성명] 서울시는 상인 내몰고 투기·토건업자 배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중단하라
- [논평] 부동산 자산증식 당연시하는 청와대 인식 및 제도 개선 필요하다
- [성명] 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2019. 04.

- 04.01 • [성명] 대통령은 진영 장관후보자로 지명을 철회하라!
- 04.02 • [논평] 증거인멸 우려에도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
  - [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텐더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청구
  - [논평] 11년간 몰랐던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
  - [보도자료]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한 자치 단체장 감사청구
  - [카드뉴스] 공수처 팩트체크: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04.03 • [보도자료] 자동차 레몬법 적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 [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텐더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 [논평] 전국을 토건판으로 만들기 위한 에타제도 무력화 방안
  - [성명]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 [기자회견] 세운 재개발 전후 땅값은 5.7조 상승, 거품 3.6조 발생
- 04.05 • [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 하는가?
- 04.08 • [토론회] "유전자 검사, 이대로 좋은가?"
- 04.09 • [성명] 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 04.10 • [기자회견] 5대 재벌 계열사 수 및 업종 분석 발표
- 04.11 • [성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소비자 편의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토론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 [성명]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 [의견서]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 제시
- 04.15 • [기자회견]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분석결과 2,300억 부풀렸다
  - [성명]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 04.17 • [성명] 국민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 [논평]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 영구 제명하라
-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부정적
- [논평]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공개서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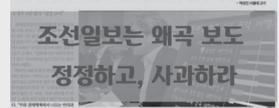


- 04.18 •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이행 평가 결과
- [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재벌개혁·부동산 문제 해결에 이진 정부와 차별성 없어
-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 [보도자료]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2005년 이후 150조 원 바가지
- [논평]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구속, 진상 규명 이제 시작일 뿐
- [카드뉴스]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
- [공동행동성명] 선거제도 개혁·검찰개혁에 관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경실련 토론회 "민주당, 증남미형 좌파 정당"

- 04.19 • [성명] 조선일보는 왜곡 보도 정정하고, 사과하라.



- 04.23 • [공동행동성명]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 [토론회] 스튜어드십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성명]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안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하라



- 04.24 • [의견서] 로스쿨 도입 10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합니다
- [기자회견] 공정위는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04.25 • [논평] 재건축대책 빠진 정부의 정비사업 공공성 방안은 반쪽짜리

- 04.26 • [공동행동성명] 무법천지 국회 만든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 04.29 • [성명] 효성그룹과 전관 변호사들의 비정상적 자문계약, 수사에 착수하라!
- [성명] 국민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 국장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에 나서라
- [성명] 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 [성명] 친재벌 경제개발성장 중심 기업지배구조를 넘어서



- 04.30 • [기자회견]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근절에 조속히 나서라!
- [성명] 문재인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라!
- [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 임해라!
- [카드뉴스] 패스트트랙 그것이 궁금타



2019. 05.

- 05.02 • [성명]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 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 인식을 우려한다
- [기자회견] 북위례 3개 단지, 영터리 분양원가 공개



- 05.03 • [토론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떻게 되었나?

- 05.07 • [논평] 판교, 위례 방식의 3기 신도시 개발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 05.09 • [성명] 이름도 못 밝히는 허술한 분양가 심사제도 즉시 폐지하라!



##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93명, 가입일 2019년 3월 22일~5월 10일)

Laam Hae	김규식	김종성	박연숙	서한석	오경숙	이명하	이종국	전성희	최관영	황경선
강성식	김기재	김진식	박종명	송유정	오진우	이병철	이현미	정국교	최동주	황명숙
강영실	김성택	김한식	박해철	신미이	오창근	이세경	이현희	정세영	최선희	황서영
고숙남	김세윤	김희관	박흥기	신의수	옥영민	이순정	이혜진	정인환	최영세	
곽재윤	김수정	류대현	백정근	신인호	유승주	이승우	이혜진	정혜진	최주환	
구인숙	김영철	류승수	봉신민	신하늘	유영주	이영철	장기숙	조광진	한가희	
권순택	김예린	명옥	서명근	안은정	유재근	이월형	장기준	조미현	한병성	
권영희	김예성	문정균	서재덕	양종규	윤미정	이은화	장시영	조형수	홍경표	
권혁훈	김재홍	박승준	서정남	연규식	윤상미	이정연	장철원	천성은	홍성진	

<b>중앙강실련</b>	고경호	권동현	김경아	김대호	김복환	김승현	김용하	김정국	김진경	김태승
	고성순	권득용	김경안	김도원	김사길	김시연	김우비	김정돈	김진구	김태완
강덕순	고영일	권만열	김경준	김동익	김상경	김시원	김우영	김정수	김진만	김태중
강마야	고영희	권봉철	김경철	김동영	김상균	김양규	김원석	김정완	김진명	김태진
강명구	고윤	권상현	김경호	김동울	김상영	김양수	김원태	김정욱	김진섭	김태현
강문희	고은주	권순남	김경환	김만기	김상우	김양진	김유찬	김정원	김진수	김태현
강민구	고은진	권순범	김관영	김만수	김상희	김연규	김유환	김정현	김진아	김태현
강병철	고지석	권순식	김광배	김명임	김생수	김영미	김윤기	김정호	김진필	김태형
강선미	공병욱	권순용	김광수	김명철	김석준	김영섭	김윤두	김정호	김진현	김태형
강승구	공양석	권순탁	김광현	김명환	김석환	김영순	김윤석	김정호	김진화	김태호
강승규	공정표	권영준	김광훈	김모드	김선필	김영실	김윤희	김정훈	김진호	김태호
강영권	공진하	권영진	김국주	김무준	김선희	김영은	김용	김제후	김찬동	김태훈
강은현	곽기훈	권오진	김규범	김문환	김성균	김영재	김은경	김종근	김찬석	김태훈
강일환	곽보경	권용승	김규영	김미영	김성달	김영주	김은경	김종덕	김찬형	김태훈
강주현	곽새별	권용우	김근성	김미진	김성수	김영준	김은섭	김종록	김찬호	김평진
강지영	곽의영	권용희	김근수	김미희	김성수	김영철	김은영	김종목	김창균	김학수
강지현	곽재윤	권윤정	김근철	김민수	김성일	김영철(일하스님)	김인근	김종민	김창선	김학수
강창걸	곽지웅	권일민	김근초	김민주	김성중	김영출	김인봉	김종배	김창식	김한기
강창구	곽혜정	권준기	김기숙	김병각	김성태	김영택	김인숙	김종익	김재윤	김한나
강창균	곽효석	권준석	김기열	김병구	김성태	김예은	김인영	김주규	김천	김해성
강철	곽희남	권준우	김기은	김병수	김성필	김오열	김인철	김주목	김철	김한동
강철규	구경이	권찬	김기태	김병수	김성훈	김완배	김인태	김주영	김철주	김현석
강철승	구성찬	권철민	김길락	김병수	김세진	김완옥	김일수	김주중	김철홍	김현성
강태호	구수정	권혁근	김남덕	김병재	김세진	김용남	김재구	김주현	김철환	김현수
강현신	구은경	권혁민	김남수	김병주	김소라	김용상	김재구	김준배	김충환	김현정
강혜정	구자범	김건호	김남훈	김병학	김수영	김용섭	김재길	김준식	김태균	김현정
경민수	구찬희	김경모	김대균	김병호	김숙희	김용숙	김재성	김준영	김태균	김형규
계충미	권경우	김경배	김대선	김보경	김순득	김용술	김재하	김준호	김태동	김형균
고강석	권기대	김경수	김대진	김보라미	김승우	김용식	김재화	김지연	김태수	김형조
고경일	권기범	김경수	김대현	김복연	김승하	김용철	김재환	김지영	김태수	김형준



김형진	문상준	박선아	박인선	반영철	손봉호	심충진	오세호	윤여림	이남경	이승수	이정후	임동범	전용일
김혜경	문석진	박선오	박인수	방상윤	손상석	심혜정	오순택	윤영곤	이다혜	이수연	이정훈	임서구	전우영
김혜숙	문세영	박선희	박재갑	방정혜	손성국	안경숙	오승훈	윤영천	이대영	이수인(이주원)	이정희	임성희	전인현
김혜순	문소상	박성배	박재익	방종수	손성일	안규창	오용식	윤은선	이덕영	이숙희	이정희	임세은	전필기
김호	문인섭	박성아	박재천	방효창	손승태	안기정	오장환	윤은주	이덕희	이순기	이종규	임영환	정경옥
김호	문장협	박성용	박점수	배동준	손영환	안병선	오정균	윤인오	이동규	이승대	이종길	임웅찬	정광화
김호경	문재철	박성정	박정민	배영환	손재운	안병익	오제명	윤일성	이동석	이승섭	이종수	임정원	정동영
김호균	문차호	박성혁	박정석	배유아	손정근	안병준	오제문	윤정섭	이동석	이승우	이종열	임정규	정명훈
김호성	문대현	박성호	박정식	배종석	손종보	안완용	오중현	윤종길	이동엽	이시연	이종윤	임종필	정명채
김호식	문현국	박성훈	박제화	배천호	손호중	안용식	오창훈	윤종빈	이동한	이애화	이중희	임청빈	정병오
김호연	문현정	박세권	박종국	배홍진	손희준	안인화	오현석	윤종호	이만호	이연재	이주하	임태영	정병철
김홍규	민남미	박세원	박종규	백경아	송계주	안정혜	오현철	윤준식	이명균	이영국	이주희	임현진	정상룡
김홍업	민병욱	박세중	박종근	백요한	송기민	안종범	오희택	윤종식	이명진	이영란	이준모	장경완	정상미
김호선	민수영	박세현	박종선	백정숙	송다겸	안지현	우호식	윤지원	이명천	이영범	이준영	장권	정상욱
김호원	민희숙	박수행	박종소	백진현	송덕원	안진걸	원동환	윤진철	이명하	이영연	이지영	장동민	정석원
김희연	박건영	박순기	박종열	변동훈	송미영	안철원	원재환	윤창원	이명훈	이영음	이지훈	장병호	정석희
김희철	박경서	박승대	박종원	변상해	송미옥	안효정	원종호	윤한필	이모세	이영주	이진경	장보름	정선철
나건일	박경숙	박승배	박종원	변재근	송병록	안희상	유관영	윤현식	이병철	이영철	이진영	장석림	정성봉
나병현	박경준	박상삼	박준수	변창우	송병주	안희숙	유기석	유효상	이봉숙	이영호	이진원	장성현	정세진
나순팔	박광현	박승욱	박지원	서경호	송수영	안희정	유기찬	음유정	이봉형	이용곤	이찬영	장승진	정승상
나일주	박근호	박승준	박지혜	서명근	송용석	안희철	유기청	이갑수	이봉훈	이용배	이창민	장신영	정승준
나준희	박기서	박승진	박진순	서순탁	송인섭	안희철	유기현	이갑수	이삼열	이용승	이창민(철우스님)	장영식	정승화
남기원	박기영	박시근	박진우	서영덕	송인윤	양광희	유남식	이강운	이상룡	이용재	이창엽	장영열	정연섭
남상근	박기창	박양제	박진호	서완석	송재경	양대규	유덕열	이건호	이상범	이용준	이창효	장영오	정왕규
남상욱	박기철	박연정	박진홍	서윤석	송하동	양동호	유동진	이경락	이상복	이운항	이창희	장영환	정용화
남원호	박기훈	박영규	박찬호	서은경	신동민	양두석	유동호	이경수	이상봉	이원식	이철우	장원규	정운수
남재걸	박남규	박영규	박창욱	서정일	신동애	양문수	유록수	이경우	이상엽	이원재	이춘수	장원택	정원철
남현주	박노건	박영기	박창임	서종대	신동엽	양석영	유명진	이경중	이상엽	이원재	이충현	장은미	정원희
남호원	박달현	박영남	박철수	서종철	신동조	양성범	유병서	이경태	이상우	이윤규	이태용	장일진	정운영
노상현	박동렬	박영민	박철주	서지훈	신동진	양세영	유인상	이계인	이상윤	이윤상	이태진	장재영	정의정
노연경	박두영	박영민	박춘건	서지원	신두철	양수장	유인환	이광열	이상은	이윤선	이학수	장중철	정의호
노재원	박래수	박영수	박춘호	서한송이	신봉기	양연식	유일용	이광택	이상진	이윤호	이학용	장진희	정인호
노재훈	박미나	박영웅	박치우	석기영	신봉진	양원표	유재경	이광필	이상진	이은기	이한길	장찬홍	정일용
노진주	박미선	박영철	박태선	석철수	신상진	양유정	유재욱	이광현	이상철	이은재	이한민	장철기	정재은
노청수	박민수	박영환	박태순	선동수	신선철	양윤숙	유재혁	이규창	이상희	이의영	이한범	장철원	정재진
노희철	박민준	박영훈	박한용	선종국	신영철	양인준	유중성	이규철	이석규	이인영	이한솔	장형환	정정래
라윤흠	박민진	박용정	박행우	설원식	신영철	양창우	유진상	이규혜	이석기	이일권	이행섭	장혜령	정재용
류도암	박병오	박용제	박현진	설창인	신원기	양채열	유평준	이균성	이석범	이재걸	이현미	장홍석	정종원
류시문	박병일	박용준	박형근	성광식	신우현	양태훈	유해신	이근식	이석제	이재길	이형세	장희곤	정주연
류중렬	박보성	박우석	박혜란	성금성	신은정	양혁승	유항임	이근조	이석진	이재욱	이혜숙	전대홍	정중수
류지성	박삼중	박원규	박호걸	성병화	신인철	엄원중	유현찬	이근태	이석형	이재완	이호경	전병순	정중영
류형욱	박삼희	박원석	박호영	성신	신정무	엄창나	유혜영	이금희	이선신	이재운	이호욱	전병식	정중식
류희근	박상대	박윤수	박화영	성용	신지영	여해경	유호림	이기승	이선자	이재은	이화순	전봉진	정지연
마경화	박상렬	박은아	박후근	성윤숙	신철영	염규석	유희동	이기우	이상근	이재임	이화주	전상용	정지용
마미영	박상울	박은정	박훈	성인제	신하늘	오경준	윤건수	이기용	이상민	이정규	이훈	전상욱	정지훈
맹경숙	박상인	박은현	박희령	소경섭	신현호	오길영	윤명	이기호	이상복	이정남	이희중	전성철	정진민
맹성렬	박상현	박은순	박희선	소진성	심동준	오병일	윤상균	이낙연	이상형	이정성	인치승	전영진	정진우
문경식	박상형	박의용	박희연	손경익	심인석	오상준	윤숙자	이낙원	이소영	이정현	임건목	전용배	정창률

정창운	주정은	최상원	허정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미경	이희승	장영	송정호	김재부	전방욱	김용운	손진일	전갑생
정태근	지동익	최재민	허중호	한국생물자재협회	김석기	임경수	장윤정	신영욱	김재준	전영권	김원용	송오성	정길호
정태영	지영근	최재용	허지영	한국화학연구원	김성수	임영희	장진영	신종성	김정근	정광민	김은주	송호석	정보근
정태성	지영석	최정표	허창재	한국화학연구원	김세용	임형백	전중찬	안춘훈	김중남	정석중	김장미	송희자	정석윤
정태완	지정희	최준혁	홍광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영	장명진	정경수	위정희	김진숙	정세환	김점수	신미경	정선우
정택수	진영수	최종길	홍대식		김재령	전은호	조영관	윤영진	김진욱	정연홍	김중현	신미애	조승재
정필성	진원석	최종민	홍도천		김재익	정성훈	조현	윤태룡	김태희	정의호	김진하	신용호	조오현
정혁제	진유식	최지한	홍미미	경제정의연구소	김준현	정애리	추승우	이승규	김학근	정혜진	김창집	신찬숙	조하영
정현우	진중화	최창배	홍성환		김철홍	조도철	하성용	이우영	김형경	조무현	김중근	심재국	진성우
정혜수	차은상	최창호	홍순관	김범	김태호	조우현	대호관세사법인	이정호	김형근	조백훈	김만열	안미나	진희재
정혜수	차진구	최철호	홍승권	김지환	김형욱	조재형		이정우	김황식	진수환	김만희	양끝선	최상주
정희성	채대영	최철호	홍영희	김혁	나경준	최강림		이중수	노영성	최규천	김필성	여남권	최선중
정희창	채민성	최철화	홍원선	노영록	나인수	최두호	통일협회	이진만	박상덕	최복규	김한기	여정애	최윤숙
조강희	채원호	최혁	홍중학	문인철	노두승	최명철		이현희	박운남	최송길	김현호	염경수	하만철
조강연	채홍석	최호영	홍중화	박상안	노웅래	최봉문	강민성	임홍승	박용섭	최소희	나양주	오성관	한경만
조경민	천민승	최홍엽	홍준표	백승호	도선봉	최윤정	강은석	장인석	박인재	최승룡	남기원	오성주	한은진
조광연	천병우	최희수	홍준현	백종호	류성룡	최정우	고석주	장형원	반태연	최우현	남덕희	오순혜	한정용
조광희	최광규	최희수	홍진구	손창민	류중석	포스코	고유환	전귀정	배정순	한동준	남희정	육근호	하남두
조규홍	최광용	최희준	홍창기	송은학	박경남	하동익	곽일환	전영선	서은주	함식	노승복	육방호	허추구
조금자	최광현	추동규	최강윤	여은미	박상위	함승희	김근식	정동욱	송문길	홍용표	노재남	육춘금	허희경
조병익	최근현	추우성	황경복	월정사	박성우	허도한	김동규	정승훈	송민석	홍진원	노재천	육충석	현정임
조성하	최기환	하상준	황광열	윤인철	박연환	현철재	김병조	정창현	송재석	한영림	류금렬	육혁수	홍성태
조성희	최덕천	하용호	황기명	이덕호	박영웅		김삼수	조광환	신미영	거제경찰서	문상모	우정숙	황분희
조성훈	최덕현	하윤진	황도수	이승훈	박정윤		김성호	주석부	신승춘		문상필	원순실	황서영
조성희	최덕호	하재현	황선영	이혜란	박찬우	시민권익센터	김용현	최우진	심규만	강경수	문성환	유천업	황한성
조순열	최동주	하현아	황선용	임효창	박희정		김은수	최호창	심윤보	강병주	박광호	윤길정	황황욱
조순홍	최명희	한문희	황선원	천미림	배운규	김강준	김일한	추재훈	심재상	강성배	박대기	윤미정	강순환(전주)
조연성	최범식	한상윤	황영미	하능식	백인길	김상현	김장철	한정훈	심현섭	강연희	박명욱	윤상준	
조용기	최병철	한상일	황유경	홍창식	서민호	김석기	김재기	홍명근	양창훈	강정숙	박성호	이갑선	
조은영	최봉준	한상훈	황이남	황은경	서순탁	김영미	김재원	황대중	원경숙	강창수	박소욱	이길중	광명경찰서
조일홍	최석준	한석용	황이숙	황정호	신행숙	김태경	김정웅	윤도현	강학도	박애숙	이도영		
조재연	최성수	한선아	황인구	심준신	김태룡	김정진		윤성원	경명자	박용안	이명화	강신재	
조재호	최성주	한성철	황인선	양우현	김택성	김중구	강릉경찰서	윤순모	고영주	박인근	이상귀	강옥영	
조정근	최성현	한승구	황정국	도시개혁센터	윤재용	김현아	김주호	이귀녀	권대용	박준기	이양식	강옥희	
조정훈	최수만	한승호	황철진		이동근	나태균	김창석	고석태	이규송	김경덕	박태원	이은경	강윤숙
조중운	최수진	한승호	황호식	고일두	이만희	박병식	김학성	고재정	이숙희	김경섭	배동주	이웅선	강주례
조중철	최승섭	한영관	황호열	공병준	이명수	서경수	김형만	구광범	이요한	김귀호	백순환	이인우	강찬호
조중호	최승우	한용환	황훈주	곽도	이민석	신희권	노귀남	권상동	이윤일	김기만	백승일	이정명	고영원
조주희	최연태	한태경	(주)영광정보서비스	곽충삼	이병준	심재원	당명숙	권오석	이은주	김대봉	서경수	이정표	고원철
조준범	최영식	함동규	기업은행 대학로지점	권영진	이상협	유주상	문행규	김남두	이정임	김만수	서원배	이정택	고원천
조진만	최은아	함두호	대성운수	권일	이양재	이대순	박경서	김남영	이제영	김상기	서주중	이정화	고형복
조진수	최원영	함영선	선우인터네셔널	김경희	이유미	이덕우	박근해	김대진	이주석	김상일	서현주	이종우	곽도훈
조진오	최원천	함형욱	전국건설노동조합	김광만	이은재	이명근	이은주	김덕기	이지은	김상호	석진국	이주일	곽은
조철제	최유영	허남중	전국민주노동조합	김금옥	이재문	이순기	박준우	김동명	이진아	김석준	성만호	이철용	구교형
조현	최은철	허범녕	전국철도노동조합	김기성	이재선	이영길	박준형	김만재	이효숙	김수영	손동석	이현길	구차환
조현준	최인섭	허병권	크레텍(주)	김덕기	이주희	이지연	배인교	김봉래	임명희	김영우	손성미	이형로	권순남
주상희	최인호	허석	판교진원분대협	김도영	이창수	이창수	이창수	배중근	김석래	장선애	김영화	장민욱	권혁이
주인권	최일	허수범	프라이머(스트리프)	김동식	이현주	이태호	서관승	김선정	전규화	김옥희	손정식	장석주	김기연



김경태	김현희	박준서	양정현	이중석	하숙례	김영길	박창현	이영구	조경록	강명천	박재욱	전윤환	<b>군포경실련</b>
김경표	김혜정	박진석	양철원	이현우	한금희	김영남	박철웅	이봉주	조광득	강승수	박정규	전호갑	
김경화	김호숙	박준선	양희연	이혜수	한상미	김영채	박태규	이상걸	조교영	강신웅	박정훈	정제봉	곽도
김기영	김희수	박태준	오광덕	이혜진	한윤선	김영현	박형철	이상각	조성식	강현주	박주영	정진수	국정아
김남권	남기표	방소현	오명희	이효성	한창욱	김영환	배백호	이상근	조인형	고영호	박현우	정택균	김대욱
김남현	남윤희	배권식	오민석	임상례	한홍기	김영환	배용태	이상길	조현지	구자근	박형진	정택동	김석현
김남희	노병일	배덕현	오성남	임지연	허기용	김인수	백영대	이승노	주지형	권구일	배상길	조경래	김애경
김다솔	노신복	배준	우동훈	임진희	허정호	김일호	백익순	이연	주호연	권보	백승국	지대근	김연승
김동범	노용래	백용구	우병설	장선	허정은	김재중	백중기	이은방	지명순	권순서	변창우	최근애	김영희
김동진	노혜숙	백정순	원범재	장진아	허창순	김재찬	변원섭	이인수	지병근	권윤택	성병근	최낙렬	김은재
김민재	노희준	변미애	유수연	전종석	홍은선	김정훈	서민호	이재석	지현도	김윤욱	성승운	최서규	김재용
김봉식	류미숙	변성수	유홍우	정도환	홍진호	김지인	서상기	이재윤	차현승	김호양	소평진	최선경	김창호
김봉화	류정희	변한주	윤승형	정병오	황동식	김창재	서상기	이정근	채인기	김귀화	송철원	최선호	김희라
김상열	마이인	서두원	윤종미	정상영	황인란	김철현	서재형	이정량	채형욱	김도형	신미정	최연호	노상래
김선호	문진숙	서방자	윤철	정애숙	황재연	김태욱	선종아	이정주	천재영	김동욱	신주식	최은경	문홍민
김성자	민찬식	서삼례	이강순	정은영	(주)테라씨이클림	김해룡	실상욱	이정학	천형욱	김보준	심재필	최자경	박노수
김소윤	박경욱	서순자	이건복	정인애	영광(주)영광	김현	소범환	이종성	천홍석	김봉교	양지오	표상욱	박상훈
김수연	박계량	서용원	이금숙	정종한	금강정사	김현모	손성만	이종택	최동기	김성만	오경숙	하영백	박세복
김수진	박광수	서유리	이기영	정지선		김현석	손점식	이준영	최용석	김연고	오영재	허심덕	박정민
김승복	박기은	서은경	이로사	정진우		김현중	손희정	이학균	최윤정	김요나단	유준호	허진	박지령
김애란	박영은	서이석	이말복	정찬규	<b>광주경실련</b>	김효중	송윤주	임가춘	최정규	김윤희	윤달근	홍인수	박지영
김영근	박문경	소문주	이명숙	정학균		김훈	신은희	임동훈	최중섭	김은희	윤순덕	황효숙	박중수
김영미	박미경	손선주	이미경	정해경	강은섭	나미영	신재안	임성태	최주영	김응중	윤종석	주광정밀(주)	석경수
김영필	박미영	손솔이	이미희	정희균	강정미	나병철	심재훈	임숙경	최진규	김인순	이관순	송석암	
김용관	박미정	송경섭	이병렬	정희진	고근	나성영	안영균	임영범	최진우	김재욱	이덕수		송지영
김용길	박미정	송해나	이병순	조미수	고부섭	류한호	안현석	임용희	하은이	김재훈	이명희	<b>군산경실련</b>	신애진
김원선	박미화	송혜선	이병철	조범상	고영삼	명노민	양성호	임정훈	하주아	김종배	이미경		심상선
김윤욱	박민관	신가람	이복자	조상희	고형석	모현숙	양한인	임정휘	한명석	김종욱	이미숙	강왕근	심재숙
김윤재	박민영	신통렬	이부순	조아라	공수현	문문옥	양해령	임종연	한샘	김종을	이민호	고계곤	안종호
김윤호	박복임	신민선	이석석	조옥경	구희선	문보나	엄창수	임현철	한희주	김준희	이상도	고덕영	양진우
김은진	박상윤	신복인	이성숙	조은하	권충화	박광복	여상구	임형채	허기석	김진억	이상철	김부영	양해택
김재성	박서윤	신선영	이성진	조태섭	기우태	박남규	오미정	임형철	허문수	김진희	이영애	김영혜	양희욱
김정	박성민	신성은	이송재	조해성	김경미	박미정	오주섭	장의수	현승만	김현미	이원재	박은아	오승원
김정미	박성배	신성호	이승봉	조흥식	김경현	박병규	오지혜	장익	홍영신	김형균	이원희	성광문	우예현
김정숙	박승원	신수진	이양희	주명식	김광영	박병일	오지홍	장춘식	황덕자	김휘연	이정건	심규만	유애순
김정자	박영훈	신숙진	이연주	주태진	김균수	박상원	오치홍	전순위	황동현	김희진	이제수	정동원	육순일
김종임	박옥남	신영옥	이연숙	지미선	김길현	박성수	유방실	정두숙	황보관석	김희철	이종률	홍관표	이경은
김종진	박은경	신은숙	이영신	진장호	김남수	박수인	유영표	정병호	(유)용진에너지	나영란	이창형	홍기원	이기순
김진	박재금	신혜정	이영호	차병일	김대원	박양우	유현	정삼문	(주)대한가스산업	나효훈	이태동	(주)제투드림시스템	이상운
김진경	박재철	신혜진	이영희	차성미	김덕은	박용수	윤두중	정완원	(주)동원메디칼	노상진	임은기	100인원엔터테인먼트	이상춘
김진숙	박재희	심상록	이원영	차정운	김동현	박용	윤봉란	정원태	(주)영암마트	라병희	임주석	OCI주식회사	이석진
김진일	박정선	심춘옥	이윤식	최경자	김병철	박이화	윤봉영	정윤남	(주)해왕도시가스	모경순	장기태	군산도시가스	이선덕
김철수	박종기	심혜진	이은경	최경화	김상국	박정열	윤영돈	정은수	고려가스(주)광주	박성도	장문석	군장에너지(주)	이유설
김학준	박종미	안경애	이은영	최미영	김성일	박종근	은광석	정일용	버스조합	박성표	장세광	세종기획	이종암
김현	박종빈	안석모	이은재	최상철	김수영	박종렬	이계영	정찬기		박순이	장영덕	신화토건주식회사	이혜경
김현정	박종익	안철환	이재춘	최재석	김순재	박종식	이근용	정찬환		박영주	장종길	영광자동차공업사	이희재
김현정	박종혁	양금석	이정희	최철규	김연순	박준곤	이길남	정해경	<b>구미경실련</b>	박응도	장준우	한화에너지	임구원
김현채	박주한	양기대	이정희	추규호	김영규	박창기	이동민	정혜련		박이숙	장홍성		정영희

전근섭	박태순	황규숙	김승환	손상호	이창진	홍희창	김원숙	배효상	이경옥	조민정	김경옥	박종두	이홍성
정미순	배건웅	황인문	김신호	손상홍	이창용	황광석	김원희	백정웅	이계자	조석귀	김경철	박종범	임종석
정미영	백종일	황인순	김영권	손상안	이해숙	황병일	김은주	백희숙	이광자	조순오	김관옥	박창윤	장미
조용석	신광하	(주)남도상사	김영모	송상수	이형태	황정현	김용배	변판섭	이광진	조승래	김광배	박철수	장은숙
조재용	신명순	(주)신원랜더카	김용두	신영섭	이희영	황종숙	김용하	서동국	이동준	조용석	김광창	박해령	장종국
주삼식	신상천	웅심이	김용찬	신홍권	임윤섭	(주)남개나에쓰	김인철	서영석	이범규	조윤제	김두영	박혁진	전종국
차수희	심상용	칼국수	김유호	심병철	임종오	계양엔지니어링사	김재경	서영완	이병승	조항범	김명숙	박현희	전철균
최경용	심영섭	전해원엔지니어링	김재범	심준섭	장석희	에스제건설(주)	김재석	서재열	이선경	주옥규	김명진	박홍식	전철영
최병우	안철환		김정렬	안영석	장우석	영남이공대학교	김중선	서정원	이성일	주정봉	김명철	배상기	정남준
최복희	양미화		김중용	안화석	장은숙		김중하	서준수	이세경	진동규	김문재	백재봉	정명오
최용환	양영재	<b>대구경실련</b>	김중태	양우준	장해열		김중학	서한형	이승복	진동섭	김보현	서이채	정승임
최종식	어중석		김중태	양원규	장호경	<b>대전경실련</b>	김주홍	서해림	이승용	차정민	김성두	송미승	정영창
하수진	오미애	갑신	김창수	엄봉훈	장호열		김지윤	성기석	이시혜	최경호	김수경	송영중	정진대
한성수	오흥미	강연환	김천일	여우현	전상훈	강다은	김진숙	손대근	이애정	최경훈	김승호	송진호	정호원
황유민	원용벽	강점문	김태선	우동락	전영선	강명자	김진영	송민호	이영수	최낙구	김신규	송홍범	조기석
황은아	유양옥	경희창	김태수	우형택	전재호	강승연	김창근	송영환	이용훈	최미선	김영태	송희진	조성익
(주)아진화학	유영록	공영선	김태우	유성근	정경선	강영실	김창숙	송유숙	이윤숙	최봉문	김예영	신관용	조순형
군포위생(원성회)	유호석	공재식	김현조	유성호	정성윤	강재규	김중신	송윤	이윤행	최이성	김정민	신재범	조영교
신화엘라메이(주)	유영자	곽덕환	김효진	유영익	정연옥	고나현	김쾌환	송인걸	이인세	최장환	김정아	심재경	조용호
	윤미숙	권기억	남동강	유영환	정영은	고태선	김태연	송주섭	이재민	최정우	김중익	안영하	조인수
<b>김포경실련</b>	이경화	권대우	남동현	유왕근	정은숙	곽기용	김태현	신상헌	이재영	한경이	김중호	양명희	조준범
	이경희	권병훈	남윤환	윤태우	정재근	구범림	김태호	신신호	이정(버리푸드)	한기평	김창세	양승희	차경아
	이기형	권오숙	남인철	윤현식	정제영	권은남	김태훈	신현진	이정호	한동범	김태중	양영주	천현중
강명자	이두열	권오준	노윤경	윤홍식	정태완	권의경	김현정	신혜영	이정희	한성림	김판조	양판승	최명숙
김남규	이부형	권윤집	류규하	윤희주	정해용	권재구	김현조	신희권	이중범	한원중	김하성	어성준	최병기
김두관	이재홍	권태운	맹일영	이경애	정휴준	권중	김현택	신희영	이창기	홍성연	김홍석	오민정	최원수
김문경	이정규	권택중	문효상	이경택	조락현	권중숙	김현하	심영주	이철은	황의달	김희환	오승주	최일
김미자	이정수	권휘동	민영창	이경화	조문영	권철명	김형태	심응무	이형복	황재익	명근홍	오형열	최종명
김영로	이종기	기영식	박경옥	이권용	조방희	김경미	김혜천	안병진	이혜진	(주)동그랑	문귀일	원요준	최호길
김종열	이종준	길성민	박대경	이근원	조성제	김경희	김홍숙	안영찬	이홍범	(주)마루농산	문영덕	유경생	최환석
김준현	인희옥	김경민	박동환	이동영	조용원	김금숙	김환식	안재준	이화영	주원엔지니어링	문웅	유광호	하성복
김진희	정일환	김대식	박병준	이미정	조인지	김기남	노경옥	안종호	임성복	(주)한아름푸드시스템	민경준	육준혜	한성호
김창집	정정숙	김도영	박병호	이병화	조정학	김기범	노담선	안종훈	임윤택	남해엔지니어링(주)	민찬홍	윤치술	한태연
김철경	정희상	김도한	박승철	이부용	주태환	김길순	명옥	양미경	장복수	대림유통	박강일	이명희	홍건숙
김형창	조근휘	김도형	박영식	이상록	차진근	김동선	명율식	양석희	장인성	주식회사 황창해월드	박근영	이문희	홍국선
남익선	조승현	김도형	박재락	이상천	최동학	김명경	문경재	양승의	장인철	정관엔지니어링(주)광수	박석일	이병채	홍근표
도현순	조영철	김동석	박종익	이상화	최우곡	김명제	문정수	양종규	장형근	황영종합건설 주식회사	박성일	이상권	홍서준
류문식	조용문	김동철	박종철	이선혜	최원아	김명주	박근영	오세운	장화식		박성진	이인수	홍순길
류승범	조용세(영신회의원)	김명수	박준상	이성우	최은영	김병국	박상도	오종섭	전국진		박세훈	이재광	홍진표
문태식	조종석	김명혜	박한승	이연재	최종만	김성환	박상민	오학석	전영춘	<b>목포경실련</b>	박소영	이정진	
문현미	채신덕	김우중	박해식	이윤호	최준호	김성민	박성진	우금옥	전혁구		박승춘	이종화	
민경환	최영미	김미화	박희경	이장수	최한경	김성용	박영순	유기완	정국교	강병국	박승채	이찬식	<b>부산경실련</b>
박광근	최재용	김민석	배은정	이정웅	최한석	김양호	박종대	유병연	정상배	강병조	박승옥	이천호	
박만호	한재혁	김상돈	변부형	이종경	하순화	김영기	박종석	유인수	정상희	강성태	박영용	이철호	강경태
박병돈	한혜경	김상호	서정걸	이지영	한상인	김영석	박준혁	육정임	정우택	강제석	박용목	이한경	강규성
박상현	허우섭	김선완	서정철	이진태	한승훈	김영주	방영덕	윤경수	정은선	강주천	박인웅	이현중	강대명
박연희	홍석만	김선희	성윤상	이진현	허인실	김영희	방정희	윤주병	정인규	권인철	박정석	이형오	강미라
박정원	홍철민	김세화	손광락	이진희	홍승환	김욱	배동국	이건희	정희태	김경순	박정희	이형완	강민석



강병석	김미경	김재경	김훈태	박찬일	송중두	오태석	이병기	이훈전	정중학	최수영	강신길	김재학	박중학
강병호	김미경(2)	김재명	김희곤	박철중	송중화	옥성애	이병준	이희길	정중화	최승환	고영진	김정식	박중헌
강상태	김민철	김재식	남경태	박철한	송중환	옥진우	이병진	임무진	정창오	최원석	고인선	김정인	박중훈
강시명	김백철	김재일	남기찬	박태주	신경근	왕인	이병호	임우택	정훈희	최원용	고현주	김정훈	박희식
강예윤	김병기	김재찬	노경조	박한규	신군재	우명자	이봉진	임종수	정지금	최을림	공정관	김종담	반영덕
강유동	김병용	김정량	노광진	박희영	신만석	우성칠	이상백	장귀봉	정래영	최재명	곽병용	김중윤	방대식
강인중	김병하	김정민	노상훈	박희정	신병훈	우정용	이선희	장다감	정태효	최진욱	곽중환	김주철	방원욱
강정규	김보엘	김정수	노영욱	방성애	신상구	원허	이상권	장문숙	정하윤	최철원	김 철	김준섭	배석진
강주하	김복준	김정숙	노일용	배광호	신상해	유영명	이상환	장문정	정한섭	최현덕	김강석	김진태	변성수
강종목	김봉규	김정숙(2)	노효길	배수미	신성환	유완식	이상훈	장봉주	정한성	최혜경	김경순	김진태	변인미
강태문	김부근	김정순	도한영	배용준	신승균	유재기	이상희	장성호	정해균	탁영민	김경식	김진희	변인신
강필원	김부민	김정택	류강렬	배해래	신영호	유재업	이승우	장윤석	정현돈	하상철	김계남	김천수	서영기
강해상	김분이	김정현	류위훈	배화숙	신유천	유점자	이영갑	장재구	제미경	하성훈	김동수	김철민	서은진
강형숙	김삼문	김종구	류재중	백평호	신인철	유정동	이영신	장준흠	제연화	하소금	김동순	김철수	석명환
강규성	김삼수	김종기	류정호	부두봉	신정희	윤강훈	이영호	장지태	조명래	하주수	김말순	김철환	신영복
고명석	김상길	김종기(2)	류종성	서경국	신철성	윤경만	이옥형	장해욱	조명제	한가희	김명섭	김춘식	소문섭
고순성	김상배	김종민	류진호	서미화	신향남	윤나영	이용주	장희정	조상희	한기성	김미정	김충남	손병섭
고인홍	김상욱	김종한	모상선	서범수	신현무	윤상미	이용학	전보익	조양래	한병무	김미정	김태영	손재복
고재일	김상태	김주영	문규성	서봉원	신혜숙	윤석준	이원경	전선익	조연승	한병성	김병욱	김형걸	송경희
고정연	김석준	김주현	문상철	서수금	심미예	윤성미	이위덕	전세표	조영규	한병철	김부석	김형기	송제철
공병승	김석호	김주호	문재천	서양수	심삼조	윤수성	이윤석	전우철	조용언	한상준	김상기	김호준	송중철
구명중	김선년	김주희	민남순	서은정	심윤정	윤재성	이은화	전일수	조용한	한성국	김선일	김희근	신대섭
구주영	김성권	김준기	박도영	서재덕	심윤정(2)	윤재철	이일용	전진영	조유장	한성안	김선철	김희정	신선익
구효승	김성근	김진	박미경	서종석	심재준	윤재현	이재정	전찬일	조윤득	한재철	김성근	남상진	신오일
권명식	김성길	김진필	박미순	서창우	심형철	윤정현	이재호	전현수	조윤환	한종석	김성미	노금희	신재민
권병현	김성수	김진현	박미영	서현국	아영아	윤지영	이정남	전호열	조은정	한효준	김성욱	동병희	신중출
권오성	김성열	김진홍	박복용	서현식	안경옥	윤태환	이정민	정권영	조준영	허두불	김성울	라용일	신창승
권은경	김성춘	김창희	박복수	서호영	안문상	윤현철	이정식	정규용	조지혜	허민도	김수자	문재용	신현식
권재현	김성태	김철도	박석원	석승희	안병록	이갑준	이정향	정근	조홍규	허해녕	김수정	민현정	신홍사
권태섭	김성훈	김태경	박선아	석진열	안연균	이강진	이정호	정기섭	조효제	현지훈	김순복	박경미	심원흠
김가아	김성훈(2)	김태구	박성수	선근우	안원하	이경덕	이정환	정달식	주안나	혜성스님	김순봉	박경심	안경민
김강환	김성훈(3)	김태훈	박성철	선석렬	안원호	이경학	이정훈	정도영	주재민	홍경자	김승길	박경자	안국자
김경일	김세윤	김태희	박세간	설광석	안재민	이귀순	이종국	정도만	지경아	홍봉선	김승숙	박근철	안세준
김경조	김수미	김학진	박승제	설호석	안종일	이규섭	이종석	정동열	지은아	홍일표	김승철	박덕희	안종석
김경택	김승주	김한식	박시우	성병창	양대건	이규현	이종원	정말순	진수진	황범하	김시형	박만용	안종원
김광식	김쌍우	김해룡	박영봉	손병열	양동열	이남기	이종학	정명길	진효상	황보승희	김연미	박명중	양언석
김길수	김영신	김해영	박영현	손상용	양시경	이남중	이주영	정명희	차동박	황영식	김영석	박병훈	양영희
김남식	김영욱	김향남	박용주	손순용	양재화	이동윤	이주현	정미경	차동욱	황인	김영식	박상준	양진욱
김남일	김영욱(2)	김현욱	박용하	손영일	양종필	이동일	이주환	정민재	차진구	황인구	김영아	박성진	양해준
김달기	김용섭	김현재	박용한	손정현	엄세원	이동진	이준승	정성문	차창호	(주)경성에너지	김영호	박성한	어주하
김대래	김용원	김형균	박윤기	손창욱	여재호	이동환	이진수	정세자	천상수	주식회사무학	김용일	박세찬	엄경선
김대중	김용필	김혜경	박재본	손치훈	오병루	이동훈	이진수(2)	정순영	천용욱	김원기	김원기	박수경	엄태영
김도	김유경	김혜경(2)	박재욱	손현식	오상준	이동희	이정재(경성유업)	정애니	천정호	김원일	김원일	박승민	오광택
김동명	김유영	김혜신	박재홍	송순임	오상환	이두호	이춘구	정용성	천현수	숙초경실련	김유경	박영덕	오모현
김동수	김은숙	김호범	박정구	송원섭	오세룡	이만수	이학봉	정용수	최남연	김유리	김유리	박영희	오승택
김동호	김은영	김홍재	박종덕	송은주	오연석	이명식	이현우	정은호	최달용	강동우	김은희	박웅기	오윤택
김명석	김인한	김홍태	박종수	송재은	오지영	이미경	이현재	정장한	최보규	강미심	김인섭	박정민	오홍월
김명섭	김장섭	김훈	박진성	송정숙	오철조	이민호	이현주	정재호	최성관	강석태	김일환	박종갑	원은주

유성봉	이철	최용석	김민수	박태경	이상애	정순혜	(주)영진빌딩 회계팀	고관	김해만	양현석	장미진	구민진	박수경
유영민	이필순	최유정	김복녀	박화진	이상해	정양훈	김종환 회계팀	고미나	김해정	오관영	정명숙	권오병	박수형
유영창	이현미	최종현	김봉균	백혜련	이성호	정원제		고영인	김현삼	오남숙	정세진	권진일	박애경
유종완	이호석	최지문	김성연	변영선	이성희	정지운		곽도훈	김현호	오은석	정승현	김경수	박옥경
유주희	임대식	최지인	김시영	서상범	이수행	정태정	순천경찰서	곽병용	김형욱	오정순	정안철	김경철	박장수
유혜정	임시연	최진철	김영래	서수정	이승호	조병모		곽태영	김혜숙	오진호	정영주	김광윤	박태원
윤광훈	임종희	최춘파	김영태	서정근	이애형	조석환	강성민	권태근	김혜영	오현주	정용기	김남신	박현일
윤규식	장경민	최택수	김용일	서환	이영인	조승백	강철호	김경미	김호득	왕은희	정은식	김대우	방민경
윤기순	장성원	최형덕	김용철	서흥석	이영주	조은석	강현주	김경숙	김화궁	원미정	정은혜	김덕현	배만병
윤신남	장은선	최혜경	김용	성기원	이용욱	조형훈	김미정	김경애	나정숙	위성태	정이진	김동운	배연정
윤재훈	장재수	최효섭	김은주	성명순	이용호	주광애	김선명	김경옥	남기순	유창희	정정순	김명주	배우한
윤재희	장재환	탁동철	김은하	성현구	이운창	주영수	김성숙	김기범	남양숙	윤다미안	정종길	김명해	백종덕
윤정은	장주열	한상민	김장일	손성배	이원욱	주영훈	김성준	김기희	도원중	윤명숙	정진욱	김민섭	서동일
윤준	전동운	한성희	김재기	손혜정	이원재	주윤철	김중선	김대일	류영숙	윤상민	정철욱	김민정	서시은
윤지숙	전용성	함국기	김재성	송명기	이윤규	지영호	김중호	김동인	문강섭	윤성웅	정해욱	김병욱	서진숙
이건욱	전이령	함준식	김정욱	송원찬	이의봉	진대운	김지훈	김명연	문버들	이갑순	제종길	김성동	선종훈
이경상	정봉재	허우린	김종석	신경환	이재문	진승주	김현덕	김미영	문혜령	이강숙	조경래	김수은	성문현
이경애	정상철	홍련암	김중선	신지훈	이재식	진한중	나창수	김민	박경용	이경란	조안호	김수정	성종규
이관	정순희	홍명관	김중오	신한미	이재혁	최문태	박재현	김병재	박경중	이경석	조재기	김소옥	송영원
이거원	정양언	홍인숙	김준혁	심재광	이정원	최병정	박철우	김복희	박경태	이경진	조종현	김순이	송영배
이대길	정연미	홍전희	김지란	안필규	이정하	최석환	서용현	김삼엽	박금자	이근미	주만수	김양수	송요찬
이대복	정용주	홍해용	김진한	안혜영	이종령	최성배	오정록	김상혁	박동신	이미숙	채수아	김여진	송진원
이든섭	정윤희	황시영	김청극	양우혁	이종만	최영숙	위미영	김성봉	박승렬	이민근	최경숙	김연호	신권대
이동균	정은희	황영필	김종관	양재철	이종주	최은호	이상휘	김세영	박승희	이벽희	최관영	김영선	신도선
이문규	정진용	(주)강원도로	김혜영	양진하	이주연	최인수	이옥기	김세원	박영옥	이선희	최복수	김영학	신민희
이문성	정홍기	황영필 회계팀	김현태	염규용	이주현	최인자	이종철	김승철	박영준	이선희	최영화	김용필	신상문
이문영	조광덕	한살림	김혜련	예인기	이진성	최진학	이천오	김영림	박정희	이수정	최운	김은미	신순봉
이미경	조영수		김효근	오세환	이찬용	최진환	장동식	김영숙	박준연	이숙경	최윤정	김은숙	신승한
이봉진	조성열		김훈	오완석	이창모	하만호	장현철	김영애	박태순	이숙란	최임이	김일구	신영희
이상정	조현구	수원경찰서	나민수	오일용	이창진	하소진	정순관	김영희	박해부	이양주	최재우	김종혁	신정원
이상호	주대하		나태성	오지현	이판수	하창호	정은희	김옥경	박홍래	이옥희	최재림	김주남	신희정
이수영	주영래	강미경	남택진	오혜경	이필근1	한경수	조남훈	김옥수	박희경	이용진	최현수	김지연	심민규
이열호	주용현	강민철	도진욱	우양미	이필근2	한경희	조병록	김윤재	백영국	이은림	하은희	김진영	심재식
이영선	진장수	강인선	명홍진	유상태	이현미	한국지	주지은	김윤희	백지수	이은영(청령생태)	하혜경	김창현	안경모
이영수	진형배	강학천	민경록	유재성	이현순	한창균	형근혜	김은주	서정열	이정민	한수연	김한일	안영일
이영순	전성미	강희진	박다예	윤귀현	이희수	한창석	홍상우	김정란	서혜경	이정아	현유경	김해남	안은경
이우영	전성필	고병익	박동선	윤두천	이희숙	한풍교	비손이앤씨	김종길	석진성	이주옥	홍경남	김현진	안정희
이은희	최관식	고재홍	박복자	윤석신	임용순	허성균	임종채내의원	김종익	설정순	이창수	황영순	김후승	안태희
이인숙	최근석	구본숙	박완기	윤희경	임태란	허윤범	황인용신	김지훈	성준모	이천환	황현주	남화선	남현정
이재선	최길순	김경수	박용환	이경섭	임태정	허현태	경과의원	김창근	손현주	이혜내(하용내)		노국환	여충
이재정	최돈환	김경호	박원호	이경환	임혜경	홍사준	홍사준	김창모	송창식	이현선		류호웅	오경아
이중섭	최동권	김기덕	박유환	이금희	장명옥	홍영호		김창섭	신남균	이희대	양평경찰서	박기두	오성탁
이중식	최동훈	김도형	박익중	이길영	장성근	홍중수	안산경찰서	김창하	신동국	이희연		박민기	유기용
이중식	최서호	김동선	박재관	이명옥	장점숙	황경희		김철환	신윤관	임명자	강병국	박민정	유남숙
이주연	최성주	김동원	박재순	이범선	정계화	황대호	강경호	김초환	신장환	임미선	강신우	박보정	유상진
이중길	최승명	김달순	박제현	이범주	정문호	황민석	강기성	김춘호	신창하	임현규	강희덕	박석두	유선영
이진어	최애리	김미선	박준배	이병희	정성균	황성우	강수진	김춘호	양근서	장동균	고봉철	박성애	유영표
이진형	최영미	김미정	박천호	이상명	정수진	황용원	경삼수	김태훈	양태호	장동일	고혜란	박성진	윤경일



윤덕규	정혜경	김침자	<b>이천여주</b>	김성길	마애진	서정순	유경윤	이용연	장재훈	최용명	서법민에이티빙	김상열	남봉현
윤수영	정혜진	김정선	<b>경실련</b>	김성완	목현실	서희숙	유상열	이우정	전상진	최용철		김선홍	남세종
윤정원	조경송	김종구		김성재	문미자	성주영	유상희	이운용	전성호	최운용		김실	남지승
윤종대	조선희	김주환	강경모	김세동	문승옥	성희연	유승열	이윤숙	전영석	최은실	<b>인천경찰서</b>	김성근	남창섭
윤형로	조재국	김희선	강석림	김수동	문연래	송경은	유재경	이은자	정병관	최인근		김성수	남홍우
이경우	조춘선	박병규	강신옥	김수현	민승례	송영득	유재춘	이의성	정선옥	최인식	강경하	김성용	노국진
이그루	조현주	박복숙	강정순	김순업	박경룡	송이식	유혜란	이익재	정성기	최재화	강덕우	김성태	노승환
이대형	조호미	박선애	강창영	김연희	박경미	송정호	윤광석	이장우	정순현	최정관	강명선	김수자	도시성
이동연	지은숙	박성현	고경애	김영근	박기환	신계영	윤남선	이재범	정승수	최정숙	강명수	김승남	류병희
이동준	진랑규	박숙희	고윤지	김영숙	박명순	신덕선	윤남용	이재학	정욱형	최정화	강상근	김승희	류제홍
이동진	채 현	박연호	고인정	김영자	박영철	신동신	이상미	이정길	정유리	최종	강석	김시철	명선목
이명규	채홍득	배선주	공미선	김영준	박병건	신동윤	유수영	이정숙	정윤지	최종악	강석철	김연옥	명창준
이명춘	최갑주	서영남	구경혜	김영춘	박병대	신동천	윤준호	이정형	정윤희	최준봉	강욱엽	김연옥	목동훈
이미순	최두영	서진호	구준모	김옥자	박상옥	신두임	이항숙	이종송	정은영	최현희	강정호	김영구	문상범
이반식	최석운	서호영	권광일	김왕곤	박상용	신영호	이희태	이종한	정은희	하맹수	강태경	김영국	민근홍
이선희	최상범	성창희	권순원	김용섭	박상임	신원재	이은원	이주윤	정인우	하태길	고덕봉	김영옥	박경호
이수연	최상은	신재현	권영미	김용태	박선규	신은수	이강문	이준호	정일구	하헌홍	고성일	김영준	박명희
이수진	최소영	심경택	권영배	김우재	박성희	신종옥	이경수	이중재	정춘화	한덕이	고재성	김옥산	박상찬
이승용	최영보	심재수	권영진	김윤경	박수자	신철승	이경호	이진관	조경국	한덕이	고정규	김용구	박상희
이연호	최영식	안성용	권영훈	김은이	박양래	심관보	이광석	이진혁	조계만	한돈집	구지길	김용미	박석민
이완용	최예술	양삼덕	권오섭	김은하	박옥선	심규대	이광윤	이찬우	조길문	한민준	권경자	김용민	박선홍
이용호	최진식	오승석	권오주	김은희	박인	심형모	이광재	이창규	조남של	한순택	권남구	김우경	박상인
이은주	최화영	윤주현	권혁봉	김의섭	박인오	안병운	이광호	이창수	조생남	한영순	권대현	김원화	박수영
이희림	하보균	이상미	기보중	김인기	박일엽	안봉섭	이길수	이천수	조용월	한영옥	권오연	김윤식	박옥희
이자형	하신호	이식	김 준	김재순	박재선	안재영	이길윤	이춘석	조은미	한은상	권옥한	김윤태	박용해
이정숙	한민석	이유형	김강산	김재임	박재우	안정민	이미희	이춘환	조장래	한정민	권정호	김은경	박윤수
이정희	홍승희	이정희	김경건	김재홍	박진희	안창호	이박우	이한표	조정숙	한정현	김갑봉	김은영	박준용
이종인	황규영	이철	김경률	김정수	박정하	안철한	이백선	이해철	조종성	한준학	김경태	김응철	박찬화
이지연	황순찬	이평호	김경림	김정천	박정화	양정분	이복수	이현숙	조철현	한준호	김경호	김인수	박한정
이지은		이향월	김경자	김종원	박종구	양희진	이부경	이현호	조춘순	한준희	김계원	김재식	박현숙
이철규		임호상	김경중	김진영	박종오	엄기홍	이상년	이현희	조택선	한희자	김관호	김재영	박형수
이태환	<b>여수경찰서</b>	장준배	김경화	김진용	박종옥	엄태희	이상원	이호돌	조휘명	함연자	김광업	김종길	박형중
이향란		정남숙	김광식	김진창	박준모	엄희용	이상태	이호영	주상운	하림	김광호	김종욱	박홍기
임승기	강규호	정승환	김광인	김창균	박창근	여재혁	이상혁	이호일	지소연	하범석	김근영	김종호	박홍열
임정지	강성훈	정정식	김금녀	김창수	박창렬	여한수	이석환	이훈	지정철	허수행	김남돈	김종화	방수환
임진택	강용원	정주현	김기석	김학경	박태문	오근철	이선	임명원	지효숙	허임범	김대중	김주형	방호운
장영달	공성식	정차섭	김기열	김학재	박태문	오명환	이선정	임선미	진선중	허준환	김도영	김준우	배성수
장현실	권동채	제윤경	김기은	김학훈	박형국	오병재	이성훈	임성규	차준은	홍경아	김동우	김진영	배승희
전승희	권인홍	조현혁	김기태	김현숙	박홍재	오석호	이승남	임성식	채봉수	홍성동	김동호	김진희	배철현
전재은	권진구	천상국	김길홍	김형식	배경희	오성순	이양순	임승한	천기영	홍원표	김명석	김창선	백동수
전재현	김남동	최경자	김대축	김호열	배정수	오성용	이영식	임은혁	천병기	홍은하	김명제	김청우	백민섭
전종덕	김동식	최진숙	김두환	남기태	배중열	오형선	이영우	임철만	천재영	홍종민	김무룡	김태호	백원근
정동균	김동채	한병세	김미혜	남용대	변영구	우근배	이영채	임현권	최대규	황경애	김미경	김태훈	변성준
정연경	김명주	한해광	김병기	노필원	변정해	우순애	이영현	장경자	최동규	황규문	김미영	김하운	변태수
정연준	김미순	홍신아	김병수	류시근	부태길	우순희	이영훈	장교환	최병주	황인동	김병우	김학무	서경욱
정영수	김성춘		김상실	마상호	빈종진	우종만	이옥희	장영란	최병탁	황인재	김병철	김효정	서부길
정주영	김숙자		김선희	마석홍	서원교	우현녀	이용근	장원섭	최복순	황현숙	김상길	나종팔	서용성
정하성	김영표		김성국	마세진	서은숙	원종순	이용만	장원주	최성원	부려주행기사협회	김상섭	나종훈	서태원

서해안	이경진	임희진	최인용	인천상공회의소	이보향	강경희	김창기	홍기홍	박동수	이철호	구남휘	김명수	김윤정
성기건	이귀복	장일진	최일동	인천해양수산협회	이승현	강봉석	김창연	홍서희	박미경	이혜린	구병희	김미숙	김은옥
성덕규	이근영	장정민	최재혁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영식	강시영	김철수	홍성화	박민숙	임승안	구인서	김미연	김응철
성용원	이기태	장조영	최정자	인천항만공사	이장준	강영준	김형수	황경수	박민자	장기수	구인숙	김민호	김인숙
손병옥	이길성	전동춘	최정철	인천항발전협의회	이재윤	강유심	문건식	황병철	박복연	장순이	권경미	김병우	김인자
손장원	이도희	전무수	최준혁	인천항운노동조합	이점수	강인창	박미현	박승훈	박상면	장원철	권기승	김병의	김일경
송경희	이동기	전성식	최찬용	한국관광협회	이정	강정임	박승훈	박승훈	박종갑	장재식	권미경	김봉주	김일복
송문성	이루다	전영진	최현		이현희	강지용	박재완	천안아산	박종복	전옥균	권성안	김상무	김재복
송원덕	이리라	전용성	최혜자		임규삼	강창균	변성언	경실련	박태서	전중환	권수복	김상수	김재숙
송인선	이문의	전준권	한기남	전주경실련	장석재	강태운	변정철		백우현	정관순	권순택	김선영	김재춘
송태영	이법열	정기호	한만송		전기환	고미선	변종욱	강민숙	복아영	정구봉	권영기	김선희	김재학
신국철	이병기	정낙식	한창원	강원군	정세윤	고병기	부상원	강용봉	소삼영	정미영	권영희	김성민	김정문
신병철	이병철	정두용	함지현	강유정	조선환	고봉수	송석연	강은선	신대식	정병인	권오건	김성수	김정웅
신은철	이상동	정미경	함창학	강창수	조찬완	고상봉	송승호	강태윤	신동현	정성진	권은은	김성식	김정일
신종한	이상영	정석환	허도병	강현민	주재호	고석건	안영철	강희두	신영호	정진선	권태성	김성중	김종구
심연삼	이성환	정선오	허명한	강호수	진정현	고성봉	양백윤	고영술	신영철	조영주	김갑용	김성천	김종기
심정순	이애경	정승연	허우범	고동우	채주석	고영수	양복심	구분영	양경모	조하심	김강일	김성호	김종철
심창선	이연숙	정연중	허주형	곽이구	천상덕	고영식	양봉석	구자형	양승조	주진혁	김근도	김성희	김종철
심현창	이영권	정재영	허창희	국승철	최낙용	고정훈	양시경	김경은	엄금자	최석남	김근일	김승일	김종태
심현열	이용우	정재윤	홍기석	권미경	최동성	고태식	양호진	김기태	오세훈	최장은	김경자	김수열	김종태
안동찬	이용준	정진오	홍옥표	김만식	최문희	김경용	여영준	김길년	오수균	하종률	김경자	김수환	김주복
안병준	이원구	정창훈	홍인성	김병석	최수진	김남혁	오승용	김명호	오승화	한문식	김경호	김애영	김준년
안재균	이의재	정철	황규철	김수환	최오일	김동욱	오영익	김문수	오인철	한형규	김계욱	김양식	김준봉
안희섭	이일희	정화석	황덕성	김용권	최정일	김동진	오정훈	김미경	유영길	허종일	김관식	김연식	김준수
양외만	이재학	정희윤	황수연	김용휘	최진희	김명준	오종선	김미수	유영진	황규훈	김광남	김영근	김준태
양희석	이정림	조광희	황용선	김장기	한병규	김봉석	유덕현	김봉미	유재영	황종현	김광복	김영란	김지연
엄연주	이정윤	조동암	황재우	김종원	홍순필	김봉철	유두석	김상철	유진영	황천순	김광성	김영민	김진식
여승철	이종일	조영희	(주)경인방송	김주희	황병해	김석	이성호	김수용	윤권중	(주)아라리오	김광직	김영배	김진철
오경환	이주영	조용화	(주)동우로지스	김형식		김선호	이영준	김연	윤예숙	내일시스템(주)	김광희	김영수	김창석
오광민	이주용	조현경	(주)디씨말이	라형연		김성수	이유근	김영호	윤일규		김교선	김영식	김진식
오영선	이준한	주춘식	(주)선광	박규만	정읍경실련	김성준	임숙자	김용진	윤정섭		김규설	김영재	김춘희
오달영	이지영	지석	(주)인천일보	박명진		김세검	임정현	김재완	이경주	청주경실련	김규식	김영철	김태성
오원선	이진준	진혁화	(주)인천투데이	박상민	강창조	김세희	장성욱	김종우	이계환		김규원	김영태	김태성
유동현	이찬우	차경열	(주)장곡상선	박효민	김용철	김수연	장원석	김진태	이명근	강민오	김기영	김영호	김태희
유승분	이창훈	차광윤	(주)진영이엔지	최준우	성치원	김일수	김승필	장정훈	김철수	이병덕	강병호	김길후	김영환
유진성	이철준	차동열	(주)한성라인	송약용	김택술	김신숙	정상철	김태명	이상일	강석형	김남균	김영환	김필제
유홍성	이홍우	차득기	9인선석유화학(주)	신희라	김현	김신순	조문수	김태호	이상춘	강성래	김남진	김영희	김학구
윤관옥	이한용	최경훈	길의료재단	안수현	박래수	김양보	조시중	김행조	이상호	강승구	김대광	김예성	김학실
윤대기	이행숙	최광용	도영은수(주)	안정훈	박영민	김영남	채조진	김혜영	이서영	강은희	김대웅	김원희	김현슬
윤동구	이현경	최광은	발명(주)이엔비엔비엔	양창훈	송민수	김영희	한남석	김홍철	이선열	강진성	김대중	김용규	김현상
윤영철	이현준	최금행	서원인 인력개발(주)	엄상섭	유사현	김우준	한용환	김효실	이수현	강현구	김대환	김용덕	김현주
윤미선	이형구	최두영	세화(주)공공주택(주)	오상현	이광호	김원규	허정아	니아란	이순곤	강호승	김동수	김용석	김현진
윤지의	이후삼	최병길	세화(주)인력개발(주)	유창엽	이상길	김은숙	현경호	노덕우	이승열	고상돈	김동암	김용태	김형규
윤천준	임승관	최상희	에스지이(주)	윤영수	이성실	김익태	현계담	노순식	이원자	고숙남	김동욱	김용학	김형우
윤호	임재훈	최선애	인성개발(주)	윤태영		김인영	현미영	류임상	이재천	고영구	김동일	김용규	김혜숙
윤희정	임한택	최성원	인정(주)비즈니스(주)	은영주		김재경	현성곤	류지현	이점순	곽규은	김동진	김원식	김호숙
윤희택	임한준	최성윤	인천도시공사	은용우	제주경실련	김종훈	현종철	맹창호	이종필	곽덕신	김두호	김유호	김호일
이경우	임희숙	최성진	인천북항(주)북부(주)	이민호		김진심	현창석	명진아	이중호	곽승호	김말숙	김윤모	김홍구



김환국	박영원	변은영	신용재	오명환	유환철	이복순	이종실	장기숙	정지성	최성희
김황래	박문희	변의수	신용환	오미정	육미선	이상규	이중윤	장남운	정지영	최영중
김효일	박미영	변장섭	신의수	오병건	육종길	이상식	이중한	장동대	정진아	최용찬
김희수	박법혁	변필섭	신인호	오석송	윤건영	이상정	이주봉	장병순	정진원	최우식
김희숙	박석현	불원진	신철영	오세란	윤관수	이석구	이주선	장병희	정진하	최운침
나재경	박성순	불은근	신태경	오세봉	윤미정	이석호	이주형	장선배	정철	최윤정
남기상	박성호	서건석	신해운	오연경	윤병선	이석희	이준수	장시영	정충선	최은실
남성욱	박세복	서길용	신현규	오영미	윤병희	이선미	이준희	장영건	정태진	최익완
남윤빈	박세웅	서미화	신현식	오영애	윤석위	이선순	이중섭	장재봉	조경주	최종문
남중순	박연수	서완석	신희숙	오영필	윤승현	이선우	이중헌	장홍원	조경주	최종예
네모도 마시쁘구	박연숙	서준철	심규석	오윤주	윤여일	이성우	이중훈	전경아	조규완	최종익
노근호	박영미	석영용	심서현	오재만	윤경수	이승애	이지숙	전광호	조규호	최종현
노만균	박영순	선종열	심수영	오제세	윤진현	이수복	이지영	전금희	조동순	최진욱
노재량	박완희	선지연	심영미	오종영	윤찬열	이수영	이차영	전년규	조동욱	최진완
노진호	박용연	설경철	심재원	오준영	윤태한	이수한	이찬호	전동기	조상현	최종진
도경민	박은경	성기남	안건수	오창근	윤환식	이순남	이창록	전병선	조성구	최태호
도선봉	박익규	성창기	안병대	오태경	윤현우	이순정	이철중	전용렬	조수중	최현숙
도승기	박인숙	성환용	안영숙	오태진	윤효영	이순호	이철희	전용표	조승연	최형도
라윤애	박인자	소소창	안윤숙	오훈영	이기빈	이승배	이한례	전우석	조영화	최호균
류규식	박인환	손은희	안은정	우상동	이건철	이승우	이해승	전창해	조용숙	표한홍
류근모	박재경	손정훈	안장현	우장명	이경수	이승준	이항숙	전형천	조원주	풍경섭
류근윤	박재관	손효진	안종태	유경훈	이경순	이승준	이현수	전희택	조윤희	하옥란
류대현	박재익	손희준	안창만	유광선	이경희	이연옥	이현식	정길재	조은애	하태종
류덕환	박정연	송광희	안창현	유광식	이광식	이영로	이현주	정란희	조을선	한범덕
류승수	박종국	송미애	안태희	유국열	이광용	이영숙	이해정	정문섭	조일원	한상화
류연욱	박종룡	송선호	양계인	유근수	이광희	이영진	이해진	정미화	조정식	한성원
류용걸	박종을	송유정	양기정	유미숙	이귀숙	이영희	이호상	정병숙	조종호	한승환
류우열	박지영	송은숙	양기춘	유민상	이귀형	이유정	이화련	정상섭	조진희	한연수
류재욱	박진우	송일근	양미선	유민채	이규선	이은숙	이호숙	정상신	조창영	한영선
류재형	박철규	송재구	양승주	유선우	이기정	이인우	임건철	정상완	조항전	한원영
류지봉	박철석	송재봉	양영순	유성훈	이길재	이일만	임근수	정성래	조형규	한인섭
류진호	박철완	송재창	양원철	유순영	이길환	이일우	임기중	정성희	조혜경	한종실
류찬걸	박해순	송태성	양찬섭	유승덕	이대응	이장희	임노열	정세영	주서택	함명욱
류학천	박현순	송태화	엄경출	유승주	이도영	이재덕	임동현	정수창	주재구	함종철
류현숙	박호표	송혜근	엄승용	유시송	이동로	이재숙	임미애	정순배	주창백	함창모
마재광	박희분	송효현	여명수	유영경	이동진	이재영	임병락	정승희	지동규	허석렬
맹석주	박희자	신경아	연구식	유영숙	이두영	이재영	임성총	정연경	지유석	허성만
맹현숙	반영운	신규식	연구용	유영아	이민형	이재원	임승빈	정영섭	진종현	허영
문종국	반주현	신동선	연방희	유영주	이민희	이재은	임용현	정영희	차은녀	허창원
문화창	방현철	신동예	연영규	유응모	이명숙	이재춘	임은정	정우성	채희관	현상주
민경억	배병기	신명섭	연영태	유재근	이명순	이재현	임재규	정은경	최각규	현진
민선희	배봉준	신명수	연인하	유재남	이명호	이정규	임종승	정은희	최경천	형석임
민승기	백미경	신미이	연철흠	유재일	이명훈	이정석	임차남	정인수	최경호	홍강희
민청식	백승협	신성길	염경수	유창범	이미순	이정수	임한빈	정인환	최명섭	홍성학
박관주	변만수	신성일	염우	유철호	이민영	이정아	임한수	정일기	최상영	홍성학
박광수	변민수	신승주	오경숙	유충욱	이범석	이정연	임현경	정일택	최상천	홍승표
박기환	변상호	신영창	오경아	유행열	이병관	이정협	임희영	정장영	최상희	홍우표
박남순	변성민	신영희	오명진	유현덕	이병호	이종수	장경석	정재량	최선희	홍응표

홍호승	농림축산식품부	주식회사 팜펠리아	김정숙	박강욱	석영기	윤학로	전근우	최희수
황경선	대안당(지자체추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광배	박경철	손현기	이관행	전만식	하상준
황경수	두레살림경제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남철	박도수	손홍주	이복연	전미연	한희민
황리훈	디자인포커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대영	박미현	신선철	이상섭	전성휘	함태성
황선건	리드산업개발(주)		김석중	박상규	안호춘	이석원	전호성	허영준
황성주	법무법인 주성		김영준	박형일	윤준형	이승준	정의성	허장현
황중빈	서울고속(주)	<b>춘천경실련</b>	김정현	방명열	유재원	이원규	정휘돈	허종영
황희연	씨투넷(주)		김진상	방수미	윤장혁	이택수	조성모	황덕호
(주)세일	에듀크	고광수	김찬중	방수진	윤재경	이희창	조성자	황혜숙
(주)중부컴퍼니	리안트	고태규	김한택	변용환	윤재선	임재선	진장철	춘천상공회의소
공공디자인이즘	전해사(주)	권용범	남형우	변좌용	윤진현	전규호	최규만	

## 중앙경실련

기획연대국	02-766-5626	국장: 노건형, 간사: 최윤석	(사)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국장: 남은경
회원미디어국	02-766-5627-8	국장: 채준하, 간사: 이성윤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4144	국장: 권오인
30주년사업국	02-766-5629	국장: 김삼수, 팀장: 정택수, 간사: 윤은주	경실련통일협의회	02-3673-2142	간사: 조성훈
정책실	02-3673-2141-2,5	실장: 윤철한, 팀장: 최예지, 간사: 조성훈, 서희원	시민권익센터	02-766-5624	실장: 윤철한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4	국장: 권오인, 팀장: 오세형, 간사: 정호철, 김건희	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실장: 윤철한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국장: 김성달, 팀장: 최승섭, 간사: 장성현	월간 경실련	02-766-5627	이사: 음유정, 김용재

##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 광역시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고영삼, 간사: 박항미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조광현, 국장: 최은영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이광진, 국장: 서해림 갈등센터 국장: 김원숙, 협동사무국장: 김창근
부산경실련	051-761-3951	사무처장: 도한영, 팀장: 안일규, 간사: 한가희, 김세윤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김승원, 국장: 김성아, 팀장: 정지은

### 경기·강원권

경기도협의회	031-253-2265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허정호, 부장: 최미영, 간사: 김정숙
군포경실련	031-392-3111	사무국장: 황은아
수원경실련	031-253-2266	국장: 유병욱, 간사: 문은정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고선영, 간사: 허경미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이종준, 간사: 황규숙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추상운, 간사: 변정해
양평경실련	031-772-7199	국장: 여현정, 간사: 정혜진
강릉경실련	033-645-0828	처장: 심현섭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김경석, 부장: 김미정
춘천경실련	033-241-9486	국장: 권용범, 간사: 오연옥

### 충청권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간사: 김지희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최윤정, 국장: 이병관, 간사: 김미진

### 경상권

거제경실련	055-637-9451	사무국장: 배동주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조근래

### 전라·제주권

순천경실련	061-751-9993	간사: 고선휘
여수경실련	061-643-2110	간사: 최진숙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전원신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서재숙
전주경실련	063-273-4903-4	국장: 최수진, 사무차장: 강형민, 간사: 고통우
정읍경실련	063-536-6225	국장: 김은정
제주경실련	064-726-2530	팀장: 김은숙